

사회과학논문집

총련결성 50돛기념호

제 18 호

차 례

총련결성 50 돛 기념논문집을 내면서	2
《총련결성 50 돛 기념심포쑤》 개최의 취지에 대하여	4
《총련결성 50 돛 기념심포쑤: 총련의 애족애국업적과 재일동포들의 미래》	
〔1 부〕 총련 50 년의 애족애국업적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적교훈	6
재일동포와 조국	7
재일동포와 일본사회	20
재일동포와 동포조직	42
〔2 부〕 동포사회의 변화와 새 단계 재일조선인운동의 과제 및 대응책	55
새 세대와 민족성	56
현단계 재일조선인운동의 권리옹호과제	74
새 환경에 대응한 동포경제활동	86

《총련결성 50돛 기념논문집》을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된 것은 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총련결성 50돛을 맞으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어 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던 재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해주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게 됩니다.

총련은 결성후 오늘에 이르는 50년간 실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귀중한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재일동포들이 향유하고있는 모든 권리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조국을 우러러 총련조직두리에 굳게 뭉쳐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대중운동을 힘차게 전개한 결과 쟁취한것입니다.

결성 이래 일관하게 민족적애국운동로선을 고수하여 해외교포운동의 선구적 모범을 창조해온 우리 총련은 진정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이며 재일동포들의 참다운 애족애국단체이며 동포복무조직입니다.

우리에게는 1세분들의 투쟁과 삶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우며 전 세대가 이룩한 애족애국업적을 3세, 4세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세분들은 생활을 통하여 조국을 못가진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가, 나라를 잃은 슬픔, 되찾은 기쁨에 대해서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자 곧 자기 운명과 직결되어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속에 자기의 삶도 행복도 있다는 투철한 인생관을 지니고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조직의 귀중함을 자기 몸으로, 생활을 통하여 절실히 느꼈기때문에 항상 조직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였으며 조직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었습니다.

우리들은 전 세대가 남긴 이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절대로 풍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협이 지난 5월 21일 도꾜 이케부쿠로의 도꾜예술극장에서 《총련결성 50돛기념심포즘》을 가지게 된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심포슘에서는 《총련의 애족애국업적과 재일동포들의 미래》이라는 통일째마로 1 부에서는 《총련 50 년의 애족애국업적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교훈》, 2 부에서는 《동포사회의 변화와 새 단계 재일조선인운동의 과제 및 대응책》이라는 째마로 연구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논문집》은 심포슘에서 보고된 내용들을 묶은것입니다.

부족점도 많으나 이 《기념논문집》이 21 세기 해외교포운동의 새 본보기를 창조해나가는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습니다.

사협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체조직을 새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을 망라한 힘있는 조직으로 더욱 확대강화하고 학술연구조직, 학술운동단체, 학술교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 한층 높여나갈것입니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회장 김화효

《총련결성 50돐 기념심포쑸》 개최의 취지에 대하여

사협에서는 총련결성 50돐이 참으로 뜻깊은 민족적경사인것만큼 여러 정치 행사나 대중모임들과 함께 과학리론적인 차원에서 지난 반세기를 총화하고 금후 전망을 제시하는 학술적인 행사가 꼭 필요하며 또 그것을 사협이 맡아야 한다는 자각밑에 본 심포쑸을 기획하였습니다.

심포쑸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총련 50년의 애족애국업적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적교훈》을 췌마로 《재일동포와 조국》, 《재일동포와 일본사회》, 《재일동포와 동포조직》이라는 세가지 기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광복후 60년, 총련결성후 50년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운동을 규정하여온 두가지의 구조적요인과 그에 대한 우리 조직의 주동적대응이라는 시각에서 업적과 교훈을 찾으려는 안목에 기초한것입니다.

식민지반세기, 분단반세기로 특징지어지는 20세기 수난에 찬 민족사의 소산이 다름아닌 우리 재일동포들입니다. 크게 보면 20세기전반기의 식민지시대에 재일조선인문제가 발생하였으며 20세기후반기의 분단시대에 재일조선인문제가 장기화되고 복잡화되었습니다.

재일조선인문제의 발생근원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있는것만큼 그것은 원래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광복으로 하여 마땅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문제는 외세에 의한 조국의 분렬과 령전체제하에서의 그 장기화,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지속으로 하여 제대로 해결안된채로 오늘에 이르고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통치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것과 조국의 분단상황이 지속되어온것은 지난 반세기이상에 걸쳐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규정하여온 두가지의 구조적요인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1부에서는 우리 재일동포들이 첫째로, 분단된 조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둘째로, 구식민지종주국이면서 오늘까지 식민지통치의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있는 거주국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가 셋째로, 이와 같은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 총련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하는 문제를 론하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동포사회의 변화와 새 단계 재일조선인운동의 과제 및 대응책》을 췌마로 《새 세대와 민족성》, 《현단계 재일조선인운동의 권리옹호

과제》, 《새 환경에 대응한 동포경제생활》의 세가지 기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총련제 20 차전체대회가 규정한바와 같이 우리앞에 조국광복과 총련결성이라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과제가 실현되어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는 상황인식을 전제로 하고있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돐을 맞이합니다. 6.15이후의 일련의 사변들이 보여주듯이 일시적인 난관은 있을수 있으나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관계는 촉진되고 조국의 자주통일로의 움직임은 이제 막을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되고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있는 조일국교정상화문제도 일정에 오르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자주와 통일로의 민족사의 전환과 더불어 지난 한세기동안 재일동포들의 고뇌와 시련의 근저에 깔려있었던 구조적요인들이 해결될 전망이 펼쳐지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민족사의 전환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역사적단계를 주동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화목하고 유족하고 힘있는 동포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동포들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문제는 초미의 과제로 제기됩니다. 현시기 총련이 민족교육문화사업과 동포생활봉사활동을 2 대중심기둥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는것도 이와 관련 됩니다.

이로부터 2 부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과 동포사회의 새 역사를 개척해나가는 데서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수많은 현실적문제들가운데서 새 세대의 민족성, 제반 권리, 경제생활의 세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방도와 대책을 론하려고 합니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총련결성 50돐 기념심포즘

총련의 애족애국업적과 재일동포들의 미래

제 1 부

총련 50 년의 애족애국업적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적교훈

사회자:한동성

썰 마		보고자	토론자
썰마 1	재일동포와 조국	김철수	김종진
썰마 2	재일동포와 일본사회	리영수	리동기
썰마 3	재일동포와 동포조직	오규상	오명몽



《재일동포와 조국—공화국과 남조선의 재일동포정책—》

김철수

보통 해외동포정책이란 해외동포와 본국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 방침, 활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재일동포의 삶은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정책에 규정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조국의 해외동포정책, 재일동포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왔습니다.

본 보고에서는 광복후 재일동포와 조국과의 관계를 공화국과 남조선의 재일동포정책이라는 시점을 통하여 분석하며 본국의 재일동포정책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1. 공화국과 남조선의 재일동포정책의 역사

1) 공화국의 재일동포정책

조국광복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장 관심을 돌린 해외교포는 구식 민지종주국인 일본에서 민족적차별과 빈곤에 시달려 어렵게 사는 재일동포들이었습니다.

공화국의 재일동포정책의 내용은 크게 보면 재일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보호정책과 재일동포들을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운동의 주체로 보고 적극 참여하도록 해나가는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재일동포정책은 통일독립정부수립준비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앞으로 보내주신 서한 《재일 100 만 동포들에게》(1946 년 12 월 13 일)에서 시사되었습니다. 서한에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우리 조국은 강대한 위력으로써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동포들을 돌보아 줄것이며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동포들을 따듯이 맞아들일수 있게 될것》¹이라고 하면서 보호정책을 실시할 의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서한에서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분투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재일동포들을 조국발전의 주체로 보고 적극 참여시켜나가겠다는 정책도 시사하였습니다.

¹ 김일성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1 권, 1997, 조선로동당출판사, 2 페이지

공화국정부의 재일동포정책이 처음으로 표명된것은 1948년 12월 2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과 한 담화속에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담화에서 재일동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동포들에게 공화국정부의 시책을 받들고 그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²

공화국의 재일동포정책의 하나인 권익옹호정책, 보호정책이 표면화된것은 남일외무상이 1954년 8월 30일에 발표한 성명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민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법적박해를 반대항의하여》에서였습니다. 성명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며 그들이 자기 조국의 자유와 통일독립을 위하여 리승만괴뢰도당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자유를 보장하며 이미 강제로 수용한 조선인들을 즉시 석방하고 강제추방을 중지하며 일본에서의 조선인들의 거주 및 취업의 자유와 생명재산의 안전 및 민주민족교육 등 일체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며 비법적으로 몰수한 일체 재산을 반환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태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한다.》³고 하면서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권리를 굳건히 보호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라는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남일외무상성명은 당시 동포들과 일본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동포는 성명을 받고 《우리에게도 조국이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간직하였다.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난것 같다》(《해방신문》 1954.9.4부)고 하여 공화국의 보호정책에 대한 실감을 토로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성명은 참의원 문교위원회(1954년 10월 9일부터 시작)에서 사회당좌파 아라끼·세이자부로위원이 문부대신을 상대로 민족교육탄압문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는바 조일간의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재일동포들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것에 주목해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총련이 결성되어 처음으로 조국에 간 조국해방 10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과의 담화(1955년 9월 29일)에서 《재일동포들을 적극 돕고 보호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시책》⁴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①귀국희망자를 받아들이겠다는것, ②교육원조비와 장

² 김일성, 우와 같은 책, 4페이지~10페이지

³ 《해방신문》 호외 1954년 8월 31일부

⁴ 김일성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1권, 1997, 조선로동당출판사, 29페이지

학금을 보내겠다는것, ③국가표창을 할수 있다는것, ④재일동포들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할수 있다는것을 표명하시였습니다.

이후 공화국에서는 1957년 4월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송금하여 민족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안받침하는 체제를 세우며 1959년 12월 귀국의 실현, 1961년 공화국과 재일동포간의 무역시작, 1967년 재일동포 7명을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선출, 1979년 공화국에로의 단기방문의 실현 등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화국의 정책에서 특기할것은 일련의 법적조치를 취하여 상기한 보호정책을 고착화시켜나간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1967년 12월에 발표한 정부 10대정강의 9번째 항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리익과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강에서 각별히 관심을 돌린것은 재일동포문제입니다.

재일동포보호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1972년 12월에 새로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의 2항목에서 그것을 명시한것입니다. 1972년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15조에서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옹호한다.》고 하였으며 제 65 조에서는 《해외에 있는 모든 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에 수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이 조항들에 대응하는것이 제 15 조와 제 62 조인데 제 15 조에서는 권리와 함께 《리익》을 옹호한다는것이 보충되어있으며 제 62 조에서는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가 보충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되기전에 벌써 국적법(1963년 10월채택) 제2조에서 공화국정부는 해외공민을 정치적 및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합영법(1984년 9월채택) 제7조와 합작법(1992년 10월채택) 제6조에서 해외조선동포들을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시정방침 제 8 항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한다고 밝힘으로써 장차 성립될 통일국가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을 보호할 정책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것을 담보하였습니다.

이처럼 공화국정부는 국내법을 해외동포보호정책의 방향에 맞게 착실히 정

⁵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1 권, 539 페이지

비를 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 공화국의 해외동포보호정책은 드넓지 않는 국가 정책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회담들속에서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문제를 주요의제로 삼아 교섭을 해온것도⁶ 2002 년의 조일평양선언의 제 2 항에 재일조선인의 지위문제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계속 협의할것을 명문화하게 한것도 해외동포보호정책이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례로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점은 공화국의 재일동포정책실행에 있어서 총련이 논 역할입니다. 귀국실행,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송금을 비롯한 공화국의 재일동포를 위한 시책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그 시책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것입니다. 조일간의 국교가 없는 일본에서 공화국의 재일동포정책이 그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은 바로 총련과 같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2)남조선의 재일동포정책

남조선에서는 1960 년대초까지만 해도 해외교포정책자체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승만정권시기의 재일동포정책은 기민정책이었고 재일동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책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화국에 대항하기 위한 처방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정권은 1948 년 9 월 8 일 민단을 재일동포의 공인단체로 인정하였으며 1950 년 2 월 23 일에는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한국》의 표기를 인정시키게 하였습니다. 또한 1952 년 2 월 15 일부터 시작된 《한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문제를 의제로 삼아 협의하기는 하였으나 재일동포문제는 회담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교섭의 미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정권은 《해외이주법》(1962 년)을 제정하여 해외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당시는 실업대책을 위해 해외에 이민으로 내보내는데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해외에 사는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이런속에서 재일동포정책이 있었다면 동화를 조장하는 기민정책과 공화국과의 대결속에서 해일동포들의 친북화를 막기 위한 감시, 통제에 중심을 둔 친

⁶ 9 차회담에서 법적지위문제해결의 3 가지원칙을 언명하였다.

북저지, 친남유도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서였습니다. 법적지위협정에서는 그 대상을 남조선국적자에 한정하여 조선국적동포를 배제하였으며 영주권자격을 협정영주권자 1세에 한정하기로 하는 등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협정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립장은 협정체결이후에도 재일동포들이 벌린 권리획득투쟁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데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이 발효한데 이어 식민지시기 군인, 군속 혹은 로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고 사망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1월)에서도 재일동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⁷

한편 재일동포 《간첩사건》을 날조하여 재일동포를 분단체제유지에 적극 리용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기 남조선정부가 취한 재일동포시책으로서는 민단의 교육보조비로 1억 8천 4백만엔⁸의 지원(1963년~1970년), 8대국회 국회의원으로 재일동포 2명 선출(1971년), 총련동포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석대표단의 실시(1975년), 민단에 정부지원금 제공(1977년)⁹등을 올릴수 있습니다.

전두환, 로태우정권시기에도 적극적인 재일동포정책이란 찾아볼수 없습니다. 다만 1980년에 개정된 《5공헌법》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보호조항(2조2항)이 나오게 되었으며 1991년에는 소위 《91년문제》와 관련하여 법적지위대우와 관련한 《한》일각서가 교환되었습니다.

남조선정부의 해외동포정책에서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19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시기부터입니다. 그간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으로 해외교포들의 남조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한편 남조선정부도 해외교포들의

⁷ 이 법에서는 청구권신고대상범위를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에 거주해본적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배제리유는 남조선정부가 협정이 재일동포의 재산 및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때문이 였다. 하지만 일본행정당국은 이 협정으로 재일동포의 청구권문제는 해결되었다는 립장을 취하고 있는 것 만큼 남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 항의를 안하고 방치해두는것은 일본정부의 립장을 암묵리에 시인하는것 된다.

⁸ 民団 50 年史編纂委員會 1997 『民団 50 年史』, 在日本大韓民国民団, 809 페이지

⁹ 77~95년까지 약 169 억엔을 지원. 民団 50 年史編纂委員會, 우와 같은 책, 307 페이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기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것은 김영삼정권시기에 발표된 신교포 정책(1993 년)에서 었습니다. 신교포정책과 관련되는 조치로서 1997 년 10 월 30 일 외교부(현 외교통상부)산하에 《재외동포재단》¹⁰을 설립하였으며 1999 년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¹¹(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시기 남조선정부는 재일동포들의 권리옹호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그 내용은 민단이 벌리는 참정권요구운동지원 등에 한정되고있으며 관심의 대상도 남조선국적을 소유하는 사람들에 한정되고있습니다.

2. 공화국과 남조선의 재일동포정책의 차이점

공화국과 남조선의 해외동포정책, 재일동포정책에는 몇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의 대상에서의 차이, 정책의 목표에서의 차이, 정책실행에서의 차이로 정리할수가 있습니다.

△정책의 대상에서의 차이

공화국은 정책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해외동포, 재일동포를 일관하게 폭넓게 규정해왔습니다. 조선국적을 가지는 동포뿐만아니라 남조선국적과 일본국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재일동포로 규정하여 정책의 적용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것은 1972 년사회주의헌법 제 15 조에서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라는 공민보다도 외연이 넓은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것을 보아도 알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헌법 제65조에서 쓰이고 있는 《공민》이라는 표현도 1963 년에 공포된 국적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조 1항에서 규정된 《공민》은 《조선민주주의

¹⁰ 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뉴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하며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및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민족문화 및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사업, 동포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한다.

¹¹ 해외동포들의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의 사회경제적활동을 내국민과 동일한 수준에서 할수 있게 함.

인민공화국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화국이 창건되기이전의 국적을 소유했던 사람들속에서 대부분을 공민으로 인정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헌법과 국적법을 통해 공화국의 보호가 미치는 해외동포, 재일동포의 범위를 아주 폭넓게 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남조선은 해외동포를 공화국에 비해 협소하게 규정해왔습니다. 헌법(5공헌법)에서는 보호대상을 《재외국민》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1999 년에 공포된 《재외동포법》도 시행당시 그 대상을 남조선국적소유자 혹은 소유하였던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주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누었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하였으며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전자는 국적요건과 영주요건을 가지고 규정한것이며 후자는 과거국적주의에 따라 규정한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식민지시기에 해외에 류랑하게 된 동포속에서 계속 조선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포,또 현지의 국적을 가진 동포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재외동포법》은 2001년 11 월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미주지역이나 유럽등에 거주하는 남조선정부수립이후에 이주한 동포와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남조선정부수립이전의 이주동포를 구분하여 전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후자는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리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4 년 3 월에 법개정을 하여 현재는 법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¹²

단지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재외동포》를 ①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라고 하여 혈통주의에 따른 폭넓은 규정을 채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단의 활동에만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는것임을 류

¹² 《외국국적동포》의 규정에 《대한민국정부수리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는것을 보충하였다.

의해야 할것입니다.

△정책의 목표와 실행에서의 차이

공화국정부의 재일조선인정책의 책정방향은 공화국의 해외국민인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첫째로 재일동포들의 일본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것, 둘째로 조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재일동포들을 적극 참여시켜나가는데 있습니다. 재일동포에 대한 보호정책과 조국발전의 주체로 내세우는 정책이 공화국의 재일동포정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은 이 정책목표를 구체적인 시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해왔으며 그것도 일관하며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해외동포정책, 재일동포정책은 오래동안 무책과 기민정책, 친북화저지정책이 지속되어 오다가 김영삼정권이후 정립된 신교포정책에서 정책목표의 제도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교포정책의 기본목표는 첫째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의 성공적인 경제적·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것, 둘째로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정신적纽대를 강화하는것, 셋째로 본국과 거주국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교량적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것으로 정하였습니다.¹³ 현재로무현정권도 이 정책을 기본적으로 tap습하고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조선정부는 이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거주국과의 외교적마찰을 우려하여 차별, 불평등,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는 외면하고 문화, 교류사업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재일동포정책에 한정하면 남조선정부의 대응은 재일동포들의 권익옹호, 문화교육사업증진의 양면에서 소극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¹³ 이 정책의 하위목표는 첫째로 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에서 확고한 경제, 사회적위상을 확립하도록 지원하며 둘째로 민족의 동질성유지와 본국과의 뉴대관계지속을 위한 민족교육을 지원하며 셋째로 동포사회가 자유민주적기치하에서 대동단합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넷째로 재외동포행정창구를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공파으로 일원화하는것이며 다섯째로 본국관련 경제활동을 장려, 촉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두고 있다.

3. 문제제기

마지막으로 재일동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재일동포정책의 책정과 그 실행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밝히고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화국의 해외동포정책은 해외동포들을 광범하게 포섭하고 보호하자는 측면이 강하지만 일본과 같은 국교가 없는 나라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공화국의 해외동포정책을 효력을 발휘하자면 조일간의 국교정상화가 초미의 과제로 됩니다.

다음으로 남조선의 재일동포정책을 시정하는데서 제기되는 과제는 우선 재일동포관을 전환하는것입니다. 랭전시대, 분단체제속에서 형성된 재일동포관을 가지고 조선국적자를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재일동포의 력사와 처지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호호혜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남조선의 현 해외동포정책이 해주는것보다 기대하는것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있는데 일방통행적인 역할만을 기대할것이 아니라 상호호혜적이라야 하며 나아가서는 재일동포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더 위해주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동포정책, 재일동포정책의 책정과 그 실행에서 재일동포자신이 적극 참여할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나가야 하며 거기서 총련조직의 역할을 한층 높여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역할을 생각할 때 공화국과의 관계에서 뿐만아니라 남조선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가능성을 모색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사협중앙 리사, 조선대학교 강사)

(토론)

《남조선의 재일동포교육정책과 실정에 대하여》

김종진

남조선의 재일동포정책에 대하여 교육문제를 민단교육관계자의 논문과 그들의 대화로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40 여년동안 총련의 민족교육현장에서 사업하면서도 민단의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린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교육을 논할 때 우리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외는 생각도 못했기때문입니다.

그러다가 6.15 북남공동선언이후에 북과 남의 화해와 교류가 진척되는 역사적전변속에서 사협도까지지부는 민단과 남조선의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정보와 문헌들을 교환하게 되었으며 민단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위하여 민단과 남조선인사들을 만나 《재일동포정책은 무엇인가》, 《기민정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내용은 무엇인가》, 《민주화이후 어떤 전환이 있는가》, 《민단에 대한 본국의 정책은 무엇인가》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질문들에 대한 리론정연한 대답을 얻을수가 없었으나 민단학교에 대한 논문들을 얻을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한정적이거나 얻은 논문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의 재일동포민족교육정책과 실정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1. 남조선의 재일동포교육정책

남조선의 재일동포정책은 기민화정책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5 년 6 월 22 일에 조인된 《한일협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소학교 또는 중학교으로의 입학을 인정하는 조취를 취하며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학교에로의 입학자격을 인정한다.》는것을 명시한것으로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권의 시점이 결락되고 있을뿐만아니라 재일동포들의 〈동화교육〉 정책의 추가승인이며 기민화였다.》(1)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정부도 경제개발이란 본국내의 사정을 우선시켜 법적지위협정을 체결

하였기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재일동포는 〈권리〉가 아닌 〈혜택〉으로서 그 생활실태에 어울리지 않는 법적지위와 대우밖에 얻을수 없었다.》(2)와 같이 기민화정책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민화정책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동화정책을 서슴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의 국적과 영주권을 관련시키면서 민족교육의 규제, 관리를 강화해나갔다. 1965년 12월 28일 두개의 문부차관통달이 나왔다.

… 이것은 동화교육의 제도화와 민족학교의 규제를 동시진행시켜 민족교육을 허물어버리려는 의도였었다.》(1)

이러한 기민화와 동화정책은 재일동포정책의 기축으로 되었으며 민단교육사업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1990년대의 김영삼정권이후 겨우 재일동포정책이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나 큰 전환은 볼수 없었습니다.

《재일동포들과 모국과의 정신적연대강화》, 《모국과 거주국과의 교량적역할강화》등이 제창되었으나 기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1991년 1월 10일 《한일외상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각서》가 서명,교환되었으나 그 내용은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국어 등의 민족의 전통 및 문화를 보존하려는 재일한국인사회의 희망을 이해하여 현재 지방자치체의 판단에 의하여 학교의 과외에서 진행되고있는 한국어, 한국문화의 학습을 앞으로도 지장없이 진행되도록 일본정부는 배려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민족교육을 보장하고싶지않으려는 일본정부의 자세를 볼수 있다.》(3)는 교육관계자의 지적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정권의 주동적인 정책이란 없고 실질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2. 민단학교의 실정

남조선인사와 민단관계자들은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에서 잘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단학교의 실정에 대하여 《…본국정부가 그렇저렇 지원해주고있기에 명목상 학교로서 존재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못하고있는 학교가 있다.… 민족학교의 장래는 밝지못하다.》(3)고 교육관계자는 지적하고있습니다.

민단에는 백두, 건국, 교토, 도쿄의 4교가 있으며 도쿄는 사실상 래왕자자녀학교이며 다른 3교가 재일동포자녀들의 학교로 되어있습니다.

학생수는 1996년 현재 1,739명인데 재일동포자녀는 65% 1,114명입니다. (2004년 5월 현재 1,731명입니다.)

학교가 오사카, 교토, 도쿄의 3개 도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광범한 동포들에게 민족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 건국, 교토의 민단학교들은 현재 일본교육법의 1조교로 되어있습니다.

1조교로 된 민단학교의 문제점은 첫째로, 학교명에서 《한국》명칭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예컨대 《교토한국학원》을 《교토국제학원》으로 변경하였습

니다. 《1조교인가를 얻은 학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4)

둘째로, 과정안에서 일어가 《국어》로 된 것입니다.

식민지시기 《국어》가 다시 오늘에 와서 《국어》로 될수 없으며 이는 응당 일어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단의 민족교육의 일본의 학교체계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민족교육이자 모국어교육이란 교육사업의 근간이 위태롭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단학교들에서는 교수용어가 일본말로 진행되어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우리 말 회화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계민족학교의 한국어의 수업시간수가 결정적으로 부족합니다.》(1)고 교육관계자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민단학교는 모국어습득이란 기본사명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외에도 민족교육에 대하여 논해야 할 중요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양성, 초중고대학까지의 완성된 교육체계의 확립, 교과서의 자주편성능력, 학교관리방법의 조직화, 학생들의 학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족교육의 목적과 사명문제와 관련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교사가 좋고 나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식의 강약이 민족교육을 좌우한다.》(4)고 말하는바와 같이 자체의 민족교육체제와 내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민단학교관계자들속에는 민단학교의 장래를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습니

다.

《그리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미가요〉를 부르고 〈히노마루〉를 제양하지 않을수 안될 어려운 처지에 몰리지 않는가하는 걱정을 한다.》(5), 또한 《민족교육을 하는 〈한국학교〉로서의 자주성은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점점 약해지는것을 충분히 예측된다.》고 그 추세를 지적하고있습니다.

이상 민단의 정규학교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비정규학교들도 있습니다.

《해외한국인의 민족교육은 … 저변확대를 기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것이 가장 현명한 민족교육방안이라고 할수 있다. … 지금 일본전국 42 개소에 있는 한국교육원의 통폐합문제가 있다.》(4)

비정규학교의 《나고야한국학교》의 토요아동반은 《2002 년은 2 학급, 2003 년에는 3학급, 2005년에는 4학급으로 증가하고있다.》(5)고 합니다. 교장은 그 리유의 하나를 최근시기 일본에서 일어난 《한류》의 결과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민단학교의 학생이 감소되는속에서 《나고야한국학교》의 비정규학교 학생수가 증가하고있는것은 재일동포들속에 민족교육에 대한 의욕과 요구가 존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상의 민단관계자들의 논문들에서 민족교육문제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정책과 민단의 교육사업에 대한 저세를 엿볼수 있습니다. 특히는 남조선당국의 정책부재와 민단의 자립적인 관리력량이 부족합니다.

(사협도카이 회장)

* 인용자료

- (1) 《민족학교에 있어서의 민족교육에 대하여》(리명 교또합국중고등학교 교감 2003.3.5)
- (2) 《한국민단의 50 년의 걸음》(민단중앙 5 月書房)
- (3) 《민족교육에 대한 회고와 방향》(황영만 민단중앙 부단장 2003.8)
- (4) 《민족교육반세기》(김 환 한국나고야학원 전원장)
- (5) 《나고야한국학교의 연혁과 초등부에 대하여》(윤대진 나고야한국학교 교장 2005.4)

《재일동포와 일본사회》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과 사회의 차별구조-

리영수

재일동포와 일본사회의 관계, 다시말하여 재일동포들의 현황을 규제하는 일련의 요인들을 분석하는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재일조선인운동의 교훈과 앞으로의 과업을 밝히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기때문입니다.

재일동포들을 규제하는 요인으로서의 조국의 분단상황과 유관국들의 정책, 본국과 일본의 관계 등 민족전체를 둘러싼 환경, 조건과 함께 직접적으로는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을 들수 있습니다.

재일동포들을 규제하는 요인이 크게 두가지로 되는것은 해외교포운동이 민족의 한성원으로써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측면과 해외교포로서의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두측면을 가지게 된다는 특성과 관련 됩니다.

재일조선인운동 역시 민족전체를 둘러싼 조건과 함께 거주국인 일본의 환경과 조건 특히는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에 의하여 여러모로 규제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조국광복 60 년, 총련결성 50 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역사적배경과 특징, 그것이 재일동포사회에 미친 후과와 현황을 정확히 밝혀야 앞으로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을것입니다.

둘째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부터 제기되고있는 일련의 그릇된 주장, 심각한 경향과 관련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상실의 위기적상황, 동포들의 조국, 조직으로부터의 《리탈현상》을 두고 전적으로 공화국과 총련조직에 문제가 있는것처럼 보고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날로 우심해지는 일본당국의 민족배타정책과 사회풍조속에서 강요된 《부의 민족의식》*과 옳바른 역사인식의 부족으로부터 새 세대들속에서는 민족에 대한 귀속의식이 희박해지고 《조선계, 한국계 일본인》으로 사는데

대하여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거나 귀화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있습니다.

* 《부의 민족의식》-렬등민족, 차별받는 민족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민족을 회피하고 차별과 탄압에 항거하는것이 아니라 일본이란 환경에 순응하여 일본인으로 살려는 의식을 말합니다.

또한 이를 어쩔수 없는 현상, 해외교포들의 피할수 없는 숙명적인 문제와 같이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단에서는 1996년 3월에 발표한 《제6차 선언문》에서 《일본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될것을 지향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탄압정책에 순응하고 그를 묵인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경향은 중요하게 일본당국의 부당한 재일조선인정책과 재일조선인력사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하고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일동포와 일본사회의 관계, 특히는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을 옳게 해명하고 적극 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1.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과 그 시기별특징

여기서는 광복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일본당국이 실시해온 재일조선인정책을 하나는 미국의 대조선정책과의 관련속에서 다른하나는 그 시기별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1)광복후 GHQ의 재일조선인정책과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광복후로부터 샌프랜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일본이 미국의 단독강점하에 있었다는것과 관련하여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 대조선정책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았습니다.

광복후 미국은 세계제패전략의 실현을 위하여 일본을 단독강점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 반공보루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미국은 초기에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세력과 독점자본을 재편성하고 종속화해나갔으며 1947년이후는 《트루먼주의》에 따

라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돌격대, 손아래동맹자로 재생시키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미국은 자료 1 에서 정리한것처럼 1945 년 11 월 1 일에 내린 대일 초기기본지령에서 재일조선인을 《해방국민》, 《적국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재일동포들을 《치안대상》으로 보고 1946 년 11 월 20 일의 총사령부발표이후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수행에서 장애가 되는 민주화세력과 조련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지배층은 미국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저들의 재생의 길을 찾고 GHQ 의 지령을 성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세계제패전략과 대조선정책, 일본지배층의 리해관계에 따라 광복후 재일조선인정책이 결정되었으며 그것은 재일조선인들을 《치안대상》으로 보고 자기들의 비위에 맞게 때로는 《일본인》, 때로는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일본사회로부터 배제, 차별화, 추방하는 동시에 관리, 동화하는 정책으로 점차 정착되어갔습니다.

여기에 이 시기의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이후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원형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 시기의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이 우선 재일조선인들의 존재를 《부담》으로 여기고 그들을 력사속에서 《말소》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하였다는것입니다.

그것은 1945 년 8 월 16 일에 군수성이 조선인강제련행자료를 불태우도록 명령을 내린데서와 1945 년 9 월 1 일에 후생성, 내무성의 통달 《경보국발 제 3 호》에서 강제련행한 조선인을 우선적으로 귀국시키려고 한데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이 형식상은 GHQ 의 지령과 지시를 집행하는 《수동적대응》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일본당국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자세, 의도가 깔려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1945 년 10 월에 각의결정하고 12 월부터 시행하게 된 중의원선거법을 통하여 잘 알수 있습니다.

일본당국은 이 법을 통하여 재일조선인들의 선거권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들을 GHQ 가 규정한 《해방국민》도 《일본인》도 아닌 《일본인이하의 적국민》으로 취급하려는 일본당국의 의도와 관련됩니다.

2) 샌프랜시스코강화조약과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면서 전쟁수행에 일본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하여 일본과 단독강화조약(1951.9.8 체결, 52.4.28 발효)을 체결하였으며 안보조약, 행정협정(1952.2.28)의 체결을 통하여 일본의 대미종속적 동맹관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는 일본독점자본의 재생, 재편성과 재무장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은 안보체제하에서 미국의 조선전쟁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경제를 회복하였으며 전후에는 자민당의 일당지배체제인 《55년체제》를 확립하고 미일안보체제와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미국의 아시아 정책수행에서 돌격대적역할을 적극 담당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화조약체결을 계기로 일본은 《독립국》으로서 《독자》적인 재일조선인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미국의 종속국으로 된 것과 관련하여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은 완전한 《독자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이중적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자료 2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 시기의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일본당국은 강화조약 제 2 조 a 항에서 규정된 《령토조항》, 다시말하여 조선반도에 대한 주권방기를 구실로 재일조선인을 완전한 《외국인》으로 규정하여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법을 2대기둥으로 한 법적, 행정적인 관리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시기의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일조선인을 완전한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본당국은 크게 2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반외국인》과 똑 같은 조건에서 귀화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조선인들은 《일본국민이었던 자》,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에 해당되지 않다고 함으로써 식민지통치의 후파로 생겨난 재일조선인문제를 력사속에서 《말소》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일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일조선인들을 《일본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리유로 차별화, 배제하고

탄압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광복직후에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원형이 마련되었다면 이 시기는 《탄압》과 《동화》정책을 적극 추진할수 있는 법적, 행정적인 관리체제를 갖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3) 《한일협정》의 체결과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1960년대 미국은 일본을 내세우고 동북아시아에서 미, 일, 《한》의 군사적 결탁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며 《한일협정》의 체결을 다그치도록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일본은 1960년 1월 미국과 신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미일공동작전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보완하고 그 집행을 대신하기 위하여 《한일협정》의 조기타결을 다그치는 한편 재무장과 해외팽창을 본격적으로 다그쳤습니다.

특히 《미프야작전계획(1963년)》에 따라 국내치안체제를 갖추는데서 장애로 되는 저항세력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포함하여 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탄압을 강화하고 체제화해나갔습니다.

또한 《한일협정》에서 남조선을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합법정부》라는것을 명기함으로써 미국이 광복후 《유엔》의 이름으로 감행해온 조선분단정책을 전면적으로 승인하고 공화국적대시정책을 취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자료 3에서 정리한것처럼 이 시기의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특징은 신 《안보조약》과 《한일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체계화되었으며 탄압과 동화에 의한 재일조선인문제의 중국적인 해결(귀화와 동화를 의미)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고착되고 본격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 2,000명대(년평균-2002명)였던 귀화자수는 1960년대에 이르러 3,000명대(년평균-3,361명)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특징을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문제가 《법적지위협정》입니다.

《법적지위협정》의 문제점은 첫째로, 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식민지통치의 피해자인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도 없었을뿐만아니라 기본권리의 보장마저 똑똑히 규정안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 정책과 남조선당국자들의 기민 정책과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둘째로, 조선반도의 분단상황을 재일동포사회에 끌어들이고 고착시켰다는것입니다.

일본당국은 지위협정에 따라 《한국국적》 소유자는 《우대》하는 한편 《조선국적》 소유자는 정치적으로 식별하고 철저한 차별과 탄압을 가하는데로 나갔으며 이로 인하여 재일동포사회의 민족분열은 더욱 격화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지위협정을 통하여 협정에 규정안된 문제는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정당화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주었다는것입니다.

지위협정에서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과 관련하여 명기한 사회보장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만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외는 적용할 법적의무가 없다는것입니다.

4) 1970, 80년대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1970 년이후 미국은 자본주의체제안에서 날로 약화되는 패권적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동맹국들의 힘을 동원하는데 보다 큰 힘을 돌리였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부담과 역할을 한층 높이며 미일 《한》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갔으며 조선반도의 《두개조선》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수행에서 주도적역할을 맡아수행할것을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안보체제를 더욱 철저히 확립, 강화하고 군사대국화를 촉진하였습니다.

특히 1978 년 11 월에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ガイドライン)》에 따라 유사시립법을 조작하며 국내탄압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미일협력체제를 《한정적이며 소규모의 침략사태》에 대처할수 있게하는 보다 실천적인 단계으로 강화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1984 년 12 월에는 조선반도전쟁씨나리오인 《미일공동작전계획》의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작전계획속에 《조선유사》에 대처한 작전계획인 《5027》이 포함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정책적요구에 따라 이 시기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특징은 계속 공화국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남조선당국자들과 결탁하여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을 한층 강화하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동화정책》을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였다는데 있습니다.

자료 4 에서 정리한것처럼 이 시기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정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3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미, 일, 《한》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야 할 요구에 맞게 일본당국은 남조선과 결탁하여 총련에 대한 탄압과 파괴책동을 강화하였다는것이며 둘째로, 사가나까론문과 신국적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재일동포들에 대한 《동화》 정책을 본격화하였다는것입니다.

결과 1970 년대 귀화자수는 4,000 명대(년평균-4,700 명), 1980 년대는 5,000 명대 (년평균-5,300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로, 국제인권조약, 난민조약의 비준을 계기로 높아진 국제적인 요구와 사회여론에 따라 일부 관련법들을 개정하였으나 《치안유지》적인 성격은 그대로 고수하였다는것입니다.

5)최근시기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1990 년이후)

1980 년대말 1990 년대초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라파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새 세계질서》수립 전략을 내세워 군사주의, 일방주의의 길로 나갔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핵의혹》을 들고나와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정책과 조선반도전쟁씨나리오에 따라 《미일안전보장 공동선언(1996.4)》과 《신가이드라인(1997.9)》을 계기로 신가이드라인관련법(周辺事態法)을 조작하였으며 아미테지보고(2000.10)이후는 2003 년 3 월에 유사립법(유사 3 법안)을 조작하여 미일협력체계,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 건설을 더욱 완성해나갔습니다.

일본당국은 유사립법의 조작으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레컨대 유사립법을 통하여 유사시에 대응한 《대처조치》라는 명목으로 《군의 행동에 지장으로 되는 활동을 경찰을 통하여 억제》할수도 《전쟁수행을 반대하는 교육기관을 문과성과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억제》시킬수도 있

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명분》을 내세워 총련과 재일동포의 활동, 민족교육을 탄압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일본당국은 반공화국, 반총련책동, 반조선인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였으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동화정책을 전례없이 강화하였습니다.

결과 1992년에 귀화자수는 7,000 명대(7,244 명)로 1994년에는 8,000 명대(8,244 명)에 들어섰으며 1995년에는 10,000 명(10,327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자료 5 에서 정리한것처럼 이 시기의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특징은 그 규모와 지속성,방법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라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 시기의 탄압정책이 조선반도전쟁씨나리오에 따라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건설을 완성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써 감행되었다는것과 그 도수로 볼때 재일조선인들이 조선민족으로 살수 없도록 《질식》시킴으로써 일본당국이 광복후 일관하게 추구해온 일본에서의 《소수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정책을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입니다.

사카나카가 「在日韓国・朝鮮人政策の展開」라는 책에서「21世紀の比較的早い時期に、在日韓国・朝鮮人社会において日本人との混血者が多数派となり、在日韓国・朝鮮人問題は、韓国人・朝鮮人と日本人の大量の結婚の積み重ねを通して自然に解決されたと評価される時代が到来するであろう」라고 한것은 그 일단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복후 오늘에 이르는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을 종합,분석하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은 식민지민족정책을 그대로 계승한것이라는데 있습니다.

특히 그 근거에는 명치유신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도구로 리용되여온 단 일민족론,야마도민족의 우월론과 타민족배타사상이 깔려있습니다.

둘째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랭전》구조속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추종하고 복종하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고있다는것입니다.

셋째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탄압》과 《동화》를 기본내용으로 한 민족말살정책이라는데 있습니다.

2.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총련의 투쟁과 교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었으며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참다운 교포조직을 가지고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인운동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총련이 걸어온 50 년간의 력사, 특히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총련의 투쟁력사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총련이야말로 재일동포들의 진정한 권익옹호단체이며 재일동포들이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총련을 지키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총련은 그 강령에서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중심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을 반대하고 온갖 민족적인 차별과 멸시, 박해를 물리치고 공민권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확대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해왔습니다.

영주권과 기업권, 제 3 국에로의 여행과 사회보장 등 재일동포들이 오늘 향유하고있는 모든 권리는 총련의 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총련이 걸어온 지난 50년간의 력사는 총련이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이며 재일동포들의 진정한 권익옹호단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총련을 철저히 고수하면서도 재일동포들의 진정한 권익옹호단체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미 보고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일본당국이 지난 기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한 사례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재일동포들이 쟁취한 일련의 권리는 공화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보호,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 그리고 일본의 진보적민주인사들의 운동을 통하여 쟁취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앞으로 계속 동포들의 단결된 힘과 역량, 각계각층 일본 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힘을 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특히 새 세기 민족적애국운동의 주인인 새 세대들이 일본당국으로부터 강요당하고있는 《부의 민족의식》에서 벗어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전체가 안고있는 고난의 현실, 재일동포들의 위기적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장서 투쟁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셋째로, 일본당국의 부당한 재일조선인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시키기 위하여서는 미국과 일본이 공화국적대시정책을 포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추종하는데로부터 출발하고 일관되고있습니다.

이로부터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의 근본적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은 민족전체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표리일치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는 단순히 일본당국과 재일조선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는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민족전체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데서 초점적문제로 되는 미국이 공화국적대시정책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전민족운동과 결부하여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을 시정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과거와 현재, 미래도 재일동포들의 운명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지켜지고 개척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재일동포들이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응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아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사협중앙 부회장, 조선대학교 교수)

자료 1-GHQ 와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GHQ 의 재일조선인정책

- 미국의 대일초기기본지령(1945. 11. 1)
- *조선을 련합국, 중립국, 적국에 속하지 않는 《특수지위국》으로 분류하여 재일조선인을 《해방국민》, 《적국민》으로 규정
- 《계획수송》의 실시(1945. 11. 13)
- 《귀국희망자등록》의 실시(1942. 2)
- *12 월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일본국적보유자》로 본다고 함
- 조선인의 입국, 재입국을 금지(1946. 3)
- 점령군의 점령목적은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지령-《직령 311 호》 1946. 6)
- 《조선인의 지위 및 취급에 관한 총사령부발표》 (1946. 11. 20)
- *재일조선인을 《일본국적》보유자로 보고 일본의 《법률규칙에 복종해야한다》고 규정
- 외국인등록령을 공포, 시행할것을 지령(1946. 2)
- *재일조선인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본다고 규정
- 조선인학생들을 일본인학교에 취학시킬데 대한 지령, 조선인학교들이 일본문부성의 지령에 복종시킬데 대한 지령(1947. 1, 1947. 10, 1948. 1)
- 공화국국기의 제양,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1948. 10)
- 조련해산을 명령(1949. 9. 8)
- 출입국관리사무국설치에 관한 각서(49. 6)
- 세관, 출입국 및 검역사무에 관한 각서(1950. 2), 출입국에 관한 각서(50. 9)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주요사항)

- *GHQ 의 《지령》이라는 미명하에 재일조선인들을 배제, 차별화,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
- 재일조선인의 《참정권》을 정지(1945. 12)
- *《호적조향》을 구실로 조선인을 일본인과 차별화, 각종 권리로부터 배제-재일조선인정책의 기점이 됨

- 1946.2 이후 《형사재판권 행사에 관한 건》, 《조선인불법행위에 관한 건》 등 재일조선인을 《일본인》 취급하는 악법 조작
- 외국인등록령 공포(1947.5.2)
- *등록령에서 입국허가의 필요, 강제퇴거와 벌칙을 규정(재일동포들의 거주권을 부인하고 치안대상으로 취급)
- 문부성학교 교육국장의 명의로 된 통달(1948.1.24)
- *조선인학교를 불승인, 동포자녀들의 일본인학교에로의 취학의무, 조선어교육의 정파로부터의 제외를 강요
- *1948.3 《1월통달》에 복종안하는 학교는 폐쇄한다는 통고, 1949.9 조선인학교 93 교에 폐쇄명령
- 《외국인재산취득에 관한 정령》(1949.3.15)
- *재일동포들을 《외국인》으로 취급, 제반 권리에서 배제
- 《단체등규정령》을 적용하여 조련을 강제해산(1949.9.8)
- *이어 《해방신문》을 폐간(1950.8), 《건설통신》을 정간(1950.9)
- 출입국관리청설치령 공포(1950.9)
- 출입국관리령을 공포(1951.10)

자료 2-썬프랜시스쿠강화조약과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1952.4.19 법무부 민사국장통달을 통하여 재일조선인을 완전한 《외국인》으로 규정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다는것, 일본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법(신국적법-1950)의 규정에 따라 귀화수속을 하여야 한다(일본국민이었던 자,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로 취급안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

재일조선인들을 완전한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본당국은 식민지통치의 결과 생겨난 재일조선인문제를 력사속에서 말소하였을뿐아니라 재일조선인을 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1952.4.28 일본당국은 출입국관리령(법률 126 호),외국인등록법(법률 125 호)을 공포

*일본당국은 법률 126 호에서 재일조선인(1945 년 9 월 20 일 이전부터 법률시행

날까지 일본에 재류하는 자)의 일본재류를 인정하였다.(본질은 영주라는 재류자격을 회피) 그러나 재일조선인들에게 강제퇴거에 관한 규정(출입국의 자유를 제한)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광복후 일관하게 견지해온 재일조선인 정책(차별, 배제, 탄압, 동화)을 추진할수 있게 하였다.

*일본당국은 외국인등록법(상시휴대, 제시의무, 지문날인, 형벌적용)을 통하여 재일조선인을 《잠재적범죄인》으로 감시,관리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1950 년부터 1980 년까지 강제송환된 재일동포들은 33,864 명이나 되었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을 《외국인》 (일본국적을 안가진 자)이라고 하여 사회보장을 비롯한 제반 권리에서 배제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생활보호(1956 년 이후 삭감),아동수당, 모자가정에 대한 대부금, 공용주택입거, 공무원 및 교원취임, 사법자격취득 등에서 제외

*일본당국에 의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관리체제의 확립과 차별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으로 인하여 많은 재일동포들이 귀국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여기에는 재일조선인을 추방하려는 일본당국의 의도가 깔려있었다)

-일본당국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추종하면서 반총련책동을 강화하였다.

*공화국과의 인적 및 물적교류를 인정안한다는 차관회의방침 채택(1955.10)

*총련을 《과파활동방지법》의 적용용의단체로 공식언명(1958.2)

*총련중앙 회관방화사건(1960.6), 쓰시마본부에 대한 습격사건(1962.2), 외국인 등록령위반을 구실로 한 강제련행사건(1963.5), 조고생들에 대한 집단적폭행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이 련속 일어났다.

자료 3-<한일협정>의 체결과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 《법적지위협정》 (1966.1 발효)의 기본내용

*협정에 따라 《한국국적》 소유자에게 《영주》를 인정-강제퇴거제도는 그대로 적용

*교육에서는 일본공립학교에로의 입학을 인정한다고 함-민족교육의 보장은 규정안함

*사회보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만을 인정

-일본당국은 《한일협정》 체결후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하였다.

*1965.10 외국인등록증의 국적기술문제에 관한 《통일전해》를 발표-조선을 《부호》로 함

*협정체결후 《영주권신청》과 《한국국적》강요

*일방적으로 귀국사업을 중단(1967.12)

*민족교육에 대한 간섭과 탄압책동(문부성 차관통달<1965.12>을 통한 민족교육의 부인, 외국인학교제도법안의 조작기도<1966 년 이후>), 조선대학교의 인가문제에 대한 문부성의 방해책동(1967.9)

*동화신용조합에 대한 강제수색(1967.12)을 비롯한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세금수탈책동

*재일동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강제추방을 노린 출입국관리법안 조작책동(1969.2)

*오카야마현본부관하 일군에 대한 간첩강요책동(1966.7), 재일조선중앙예술단 회관습격사건(1967), 일본자위대에 의한 조선대학교 사격훈련도발사건(1967.10), 각지 총련조직에 대한 습격사건 등 총련파괴책동을 감행하였다.

-일본당국은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재일동포들에 대한 《귀화》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일본당국의 귀화정책의 의도는 《조사월보》 1965 년 7 월호에 게재된 다음 문서에서 뚜렷이 되고있다.

『わが国に永住する異民族が、いつまでも異民族としてとどまることは、一種の少数民族として将来困難深刻な社会問題とな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彼我双方の将来における生活と安定のために、これらのひとたちに対する同化政策が強調されるゆえんである。すなわち大いに帰化してもらうことである。』

*당시 법적지위협정위원회 일본측위원이었던 池上努는 자기의 저서에서 《재일조선인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은 본국에로의 귀국인가 일본에로의 동화, 귀화》라고 하였다.

*귀화자수 1964-4,632 1965-3,438 1966-3,816 1967-3,391 1968-3,194

자료 4-1970,80년대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일본당국은 남조선과 결탁하여 총련에 대한 탄압,파괴책동을 강화하였다.

*일본당국은 1974 년 8. 15 저격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로골화하였으며 《시이나메모》에 기초하여 총련의 활동을 규제하려고하였다.

*일본당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총련과괴책동(《조민련》책동 1976. 4), 고향방문책동을 묵인하고 안받침하였다. 또한 일본공안당국은 총련에 대한 정탐행위를 계속 강화하였다(간첩강요책동-1981. 7, 1982. 9)

*1983 년 10 월 《랑군폭발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속에서 총련중앙본부회관에 대한 권총란사사건(1983. 11), 총련 기관습격사건(1983. 12),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일본당국은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부당한 세무사찰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풍속영업법》개악(1984)을 통하여 재일동포상공인들을 탄압하려 하였으며 총련 니이가다출장소와 상공련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색(1988. 9) 등 탄압사건이 계속되었다.

*《남조선비행기실종사건(KAL 기사건)》(1987. 12), 《빠짚코의혹사건》(1989. 8)을 계기로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감행, 일본각지에서 총련기관에 대한 습격사건, 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행위(10. 18~11. 27까지만 하여도 68 건 발생) 등이 일어났다.

-일본당국은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재일동포들에 대한 《동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坂中론문(1977. 6)에서 명백히 된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의 정치활동에 대하여서는 탄압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각종 권리들을 최대한 용인함으로써 광범한 재일조선인을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실지는 탄압만을 추구)

*일본당국은 신국적법을 개정(1985. 1 시행)하여 재일조선인들이 <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신국적법개정의 특징은 ①父系血統主義로부터 父母平等血統主義주의에로의 변경, ②신고(届け出)제도의 도입, ③호적법개정을 통하여「外国姓」으로 호적등록-日本的氏名の強制規定廃棄)

-일본당국은 국제인권규약의 비준(1979. 9. 21 발효), 난민조약의 비준(1982. 1. 1 발효)에 따라 관련법들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치안유지》적인 성격을 고수하였다.

*일본당국은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국적에 따른 권리차별을 철폐하여야 하였으나 주택금융공고, 공용주택입거자격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한것만이였다. 특히 국민연금예로의 가입, 외국인등록법에 기초한 지문날인, 형벌제도, 민족교육권의 보장,고용차별의 근절 등은 근본적인 개선을 기피하였다.

*일본당국은 난민조약의 비준에 따라 국민납금,아동수당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하였으나 출입국관리령(1981.1-《특례영주-일반영주권》제도를 적용)에서 강제퇴거조항은 그대로 적용하였다.

*일본당국은 개정외국인등록법에서(1988.6 시행)《지문 1 번,카 -드화》만을 실시했을뿐 근본적인 시정은 안했다.

자료 5-랭전종식후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일본당국은 미국의 공화국압살정책과 조선전쟁씨나리오에 기초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일본당국은 《핵의혹(1994)》,광명성 1 호의 발사(1998.8)와 고이즈미수상의 방북(2002.9)을 계기로 반공화국,반총련깜빠니아를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일본당국의 오사까부본부 강제수색(1994.4),교토부본부에 대한 강제수색(1994.6)을 비롯하여 일본각지에서 총련각급기관에 대한 총격사건,방화사건(1998.10)과 폭발물설치사건,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련속 일어났다.

또한 총련중앙본부를 비롯한 총련기관들에 대한 차압,재정수탈이 강화되고 동포상공인들의 기업활동에 대한 침해사건,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한 법개정(改正外為法-2004.2),《만경봉》호의 입항을 저지하기 위한 법개정(特定船舶入港禁止特別措置法-2004.6,改正油濁法-2005.3)이 련속되였다.

그리하여 일본에는 극단한 민족배타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이것은 재일조선인들로 하여금 <귀화>,<동화>에로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일본당국은 사회여론에 못이겨 외국인등록법,출입국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재일조선인을 치안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고있다.

*일본당국은 1991년의 외국인등록법,입관법개정에서 재일조선인들에게《특별영주권》을 부여하고 강제퇴거사유를 완화하였으며 1993 년 1 월부터는 영주

권자에 한해서, 2000 년 4 월부터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2000 년 4 월에 시행한 외국인등록법개정안에서는 형벌을 행정벌로 변경하고 갇힌기간을 5 년으로부터 7 년으로 연장하였으나 상시휴대 의무와 형벌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치안단속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비롯한 제반 권리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계속 취하고있다.

*국립대학입학자격에 대한 문과성의 성명을 발표(2003.3)

『欧米の民間学校教育評価機関の認定を受けた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のみに、税制上の優遇措置を与える』-민족교육차별 정책을 철저히 관철

*사카나카는 『在日韓国・朝鮮人政策の展開』(1998.1)라는 책에서 『この20年は日本が在日韓国・朝鮮人にとって差別の少ない自由で住み良い国に変わっていき、在日の人たちが日本社会に生きがいを見つけて各分野でめざましい活躍をした時代であった。』라고 하면서 21 세기 전반기에 재일조선인들이 없어진다는 《재일조선인소멸론》과 《한국제일본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토론)

《일본지배층의 공화국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차별정책의 사상적기초에 대하여》

리동기

일본지배층은 8.15이전도 이후도 변함없이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시와 재일 동포에 대한 차별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의 밑바닥에는 《일본민족우월론》, 《일본인단일민족론》, 《조선멸시관념》이 뿌리깊이 깔려있습니다.

1. 《일본민족우월론》

△일본민족우월론의 핵을 이루는것은 「万世一系」의 天皇입니다.

그들은 「古事記」, 「日本書紀」에 나와있는 신화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있습니다.

①조선, 중국은 왕조가 교체해왔지만 神武天皇이 나라를 세우고 3000년동안 줄곧 같은 皇統(血統)을 계승해왔기때문에 일본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월한 「国体」(国家秩序)를 가지고있는 「皇国」, 「神州」, 「神の国」입니다. 그리고 천황은 절대적으로 신성한 존재이며 그러한 「神」의 지배를 받아온 이 나라 백성들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②그들은 「古事記」, 「日本書紀」에 적혀있는 「神功皇后」, 「任那日本府」 전설을 력사적사실로 주장하면서 옛날에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였다고 왜곡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멸시와 침략을 합리화하고있습니다.

③이와 같은 일본민족우월론은 「江戸」時代前期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幕末에 구미세력이 몰려들자 위기의식과 더불어 이와 같은 사상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 1669년에 씌여진 山鹿素行「中朝事實」은 中国이 世界の 中心이 아니라

日本이 世界의 中心 (中朝) 이라고 주장하여 그후 新井白石, 林子平, 本居宣長, 佐藤 信淵 등이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물은 吉田松陰입니다.

④ 吉田松陰

1930 년 長州의 萩에서 태어나 29 세로 사형당했다.

「松下村塾」에서 久坂玄瑞, 高杉晋作, 伊藤博文, 山県有朋 등 많은 倒幕운동가 와 명치정부지도자들을 육성하였습니다.

* 《「一君万民」 이 일본민족의 우월성이다》

* 《太古에 조선은 일본에 臣屬하였다》

* 《조선, 중국을 먼저 먹어라》

일본이 구미나라들과 和親條約을 맺은 뒤 자기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松陰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魯墨講和一定、決然として我より是を破り信を戎荻に失ふべからず。但章程を嚴にし信義を厚ふし、其間を以て国力を養ひ、取易き朝鮮・満州・支那を切り随へ、交易にて魯国に失ふ所は又土地にて鮮満にて償ふべし。」(「獄是帖」)

명치유신 이래 일본지배층은 자기 스승의 가르침대로 구미세력에는 굽절거리면서 아시아나라들에는 거만하게 대하여 침략을 일삼아왔습니다.

△ 《일본민족우월론자》의 또하나의 근거는 유색인종가운데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달성하여 독립을 지켰다는데 있습니다.

* 《새로운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회》 교과서 (2006 년판)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진것은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중국, 조선은 구미의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요컨대 일본은 막말에 각성했는데 조선, 중국은 그렇지 못하였기에 일본에 먹혀도 할수 없었다는 결론으로 유도하려는 속심입니다.

* 1812 년에 발행된 高浜虚子の 기행문 「朝鮮」

「…斯く一方に被征服者を憫み乍らも、同時に此の發展力の偉大なる国民（日本人＝引用者）を嘆美する心持ちで『流石に日本人は偉い』と初めて此為す有る民族の上に、自己も其民族の一員としての抑え難き誇を感ずるのである。」

*** 福沢諭吉・脱亜入欧論**

「我日本の国土は東辺に在りと雖も、其国民の精神は既に亜細亜の固陋を脱して西洋の文明に移りたり。…支那…朝鮮…此二国…其古風旧慣に恋々するの情は百千年の古に異ならず、…我国は隣国の開明を待て共に亜細亜を興すの猶予ある可らず、寧ろその伍を脱して西洋の文明国と進退を共にし、其支那朝鮮に接するの法も隣国なるが故にとて特別の会釈に及ばず、正に西洋人が之に接するの風に從つて処分す可きのみ。」（「脱亜論」）

2. 《일본인단일민족론》—일본민족우월론의 변종—

△ 《일본인은 하나의 피줄로 이루어진 단일민족이다》

* 内藤恥叟（帝大教授）는 1888년에 발행한 「国体發揮」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凡そ此国中の人種は、一人として神の御裔孫にあらざるはなく」

* 黒川真頼（美術工芸学者）는 1892년에 발행한 「蝦夷人種論」에서 《예조》는 異民族이 아니라 흑카이도에 이주한 후 진화를 멈춘 원래의 일본민족이다. 따라서 일본렬도에는 이민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명치유신후 30년이 지나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国籍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아이누인, 오키나와인이라는 이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도 다 《일본인》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일본국민은 모두 일본인 = 일본민족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② 단일민족국가, 단일민족사회를 고수하려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일본에 사는 異民族에 대한 《同化》 아니면 追放이라는 두가지 정책에 귀결됩니다.

*1970 년대초 일본정부안에서는 재일조선인대책을 둘러싸고 두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법적지위를 불안정한 현상태대로 계속 둬으로써 재일조선인이 귀화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국에 돌아가지 않을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하나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안정시켜 일본인에 가까운 대우를 해주면 그들이 스스로 일본에 동화(귀화) 할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坂中英徳 著「在日韓国・朝鮮人政策論の展開」P7 에서 요약)

3. 《조선민족에 대한 멸시관념》—일본민족우월론의 뒤받침—

일본지배층은 조선민족에 대한 멸시관념을 고취함으로써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뒤받침하려고 애씁니다.

△ 《조선은 太古에 일본에 「臣屬」 했다》(記紀神話)

* 「日鮮同祖論」을 제창한 星野恒(帝大教授)는 天皇家의 선조는 新羅에서 온 사람이며 태고에는 조선과 일본이 하나의 나라였다고 하면서 조선침략은 원래 모습에 되돌아가는것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거꾸로 보고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온 민족이 일본열도에 사는 민족을 정복했기때문에 일본이 조선에 「臣屬」 했다고 보아야 마땅할것입니다.

△ 《조선은 근대화 안하고 잠자고있었다》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 등 피어린 근대화투쟁을 무시.

△ 《조선인은 불결하고 무기력하다》

조선인민의 견결한 반침략투쟁을 무시—사만호사건, 신미양요, 병인양요, 강화도사건때 전국에서 의용병이 서울에 집결.

결론적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첫째로, 《일본민족우월론》, 《단일민족론》, 《조선인멸시관념》은 모두 과학적근거가 전혀 없는 황당무계한 허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이와 같은 침략사상은 오랜 역사적뿌리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점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일본지배층의 침략사상은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침투하기때문에 재일 동포,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진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는 민족교육을 강화발전시켜야 하며 또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주체가 똑 바로 서고 알기 쉬운 통속적인 책을 발행,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협 조일문제간담회 간사, 통일평론신사 부사장)

(보고)

《총련 50 년의 쟁취물과 교훈》

오규상

총련 50 년의 쟁취물과 교훈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총련사업을 긍지높이 분석고찰할뿐아니라 앞으로의 총련사업의 전도를 전망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자체의 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쟁취물과 그 활동과정에서의 얻은 교훈을 정확히 분석하는것은 그 조직의 강화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건으로 될것입니다. 더우기 총련과 같은 해외동포조직인 경우 쟁취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고 활동교훈을 옳바르게 정리하는것은 복잡한 운동상황에 대처하여 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의 하나로 될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적어도 두가지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총련의 조직적전해와 관련된 점이며 다른 하나는 애국 1세대들이 쌓은 민족적애국사업에서 이룩한 전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째로 제기된 쟁마인 《총련의 쟁취물과 교훈》을 보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된 내용이 이미 총련 제 19 차 전체대회보고에서 언급되어있다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2001 년 5 월 25, 26 일 량일간에 걸쳐 진행된 총련 19 전대회는 새 세기, 21 세기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가진 전체대회라는 의미에서 세 세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망을 시사한 중요한 대회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 전대회는 오랜 기간 재일조선인운동을 이끌어온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서거한 이후 처음으로 가져진 대회였으며 운동의 역사적과정을 볼때에도 1 세대, 선대의 성과와 업적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제문제들을 토의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명을 띤 대회였습니다.

19 전대회보고의 《1 장. 귀중한 경험, 새 세기의 진로》 의 《 1) 총련은 20 세기 재일조선인운동력사에 자랑스런 업적과 귀중한 경험을 쌓아올렸습니다》의 부분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이 총화분석하고있습니다.

19 전대회보고에 따르면 지난 세기의 총련사업경험을 3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때 총련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총련의 가

장 귀중한 력사의 총화로 간직한다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조국의 운명이자 곧 재일동포들의 운명이라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함으로써 총련사업은 조국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경험입니다.

다음으로 총련이 모든 시련과 난관을 걸음마다 뚫고 나갈수 있는것은 애국 애족의 한마음으로 뭉친 동포들의 단결의 힘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입니다.

19전대회보고는 지난 세기에 총련이 이룩한 업적도 밝히고있습니다.

총련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각급 조직들과 상공인, 청년, 녀성을 비롯한 계층별 단체들, 교육기관과 문화기관, 경제기관, 출판보도기관들을 가진 위력한 동포대중단체를 꾸려놓은것입니다.

업적은 다음으로 온갖 민족적차별과 박해를 반대하고 동포들의 제반 권익을 전결히 옹호확대하였으며 정연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제를 세워 후대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우고 민족문화도 자랑스럽게 꽃피워왔다는것입니다.

또한 총련의 업적은 조국의 룡성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특색있게 이바지하였으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련대를 발전시켰다는것입니다.

본 보고에서는 19전대회보고를 참작하여 반세기에 걸친 총련의 쟁취물과 활동과정에서 축적한 총련사업의 교훈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애국 1 세대들의 이룩한 민족적애국위업의 전통과 총련의 50 년간의 쟁취물과의 관계도 명확히 하여야 할것입니다.

총련이 50 년에 걸치는 자랑스런 로정에서 이룩한 전통은 폭넓고 풍부한 내용을 가집니다.

전통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① 지난 력사적시기에 이루어져 그 뒤로는 계승성을 가지고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것 ② 어떤 집단이나 집안같은데서 오래전에 어떤 특성이 생겨나서 대를 내려오면서 물려오는것을 의미합니다.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년 3월발행) 일본사전《고지엥》에서는 전통을 《어떤 민족이나 사회, 단체가 오랜력사를 통하여 배양하고 전해온 신앙, 풍습, 제도, 사상, 학문, 예술 등. 특히 그것들의 중심을 이루는 정신적인 모양(존재방식)》이라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그럼 반세기에 걸쳐 총련사업에서 이룩하고 앞으로도 계승할수 있는 전통은 무엇이겠는가.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할수 있을것입니다.

총련의 전통은 첫째로 비록 외국땅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라도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것을 구현하려는 사상적 자세와 립장이라고 말할수 있는 사상체제와 내외반동들의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이 민족적애국위업을 수행하려는 견결한 투쟁정신, 물질적욕망보다 민족적동포적과업수행을 선행시키는 정신을 비롯한 정신세계입니다. 다시말하여 반세기에 걸치는 활동과정에서 총련일군들과 애국적동포들이 형성하여온 고상한 사상체제, 정신세계가 총련의 가장 귀중한 전통입니다.

전통은 둘째로 오랜 활동과정을 통하여 총련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입니다. 다시말하여 조직건설과 그것을 강화한 업적, 계층별단체의 조직과 지도업적, 민족애국위업에서 요구되는 민족교육기관, 출판보도기관, 예술기관, 경제무역기관 등의 건설업적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고도로 물질적으로 발전되고 활동환경이 반동들에게 포위된 조건에서 이룩한 조직건설경험, 사상교양사업경험, 사람과의 사업경험, 계층별조직을 내오고 그 활동을 조직지도하는 경험 등 참으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통은 셋째로 총련조직이 행정권이 없는 조건에서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방법, 정치사업을 선행하는 방법, 관혼상제를 비롯한 신변과 리해관계에 직결되는 일을 성의껏 도와주는 방법을 비롯하여 해외동포조직이 그 활동에서 이어나가야 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들을 들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직건설사업과 민족적애국과업수행에서 이룩한 총련의 3 가지의 전통은 총련이 앞으로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귀중한 재부로 됩니다.

본론에서는 이상 두가지점을 고려하면서 총련의 쟁취물과 교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총련은 50 년의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단계로 이어갈수 있는 귀중한 쟁취물을 창조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총련결성 30 뚝에 즈음하여 총련의 30 년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높이 치하하여주시였습니다.

《총련이 걸어온 지난 30 년의 역사는 우리 당과 조국에 끝없이 충실하여온 충성의 역사, 애국의 역사이며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독창적인 해외교포운동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온 창조의 역사, 영광의 역사입니다.》(문헌집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제 4 권, 269 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이 이룩한 업적과 성과를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여 주시였습니다.

《세상에는 해외교포들을 가지고있는 나라가 많지만 총련과 같이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민족에게 충실한 해외교포조직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참으로 총련은 애국애족의 선각자이고 애국충정의 모범이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입니다.》(문헌집 《재일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 121 페이지)

충성과 애국의 력사, 창조와 영광의 력사를 새겨온 총련의 력사는 그 활동과정에서 재일조선인운동과 세계해외교포운동에서 류례를 찾아보기 드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많은 교훈을 남기고있습니다. 총련의 쟁취물이란 곧 50년간에 이룩한 성과와 업적이라고 봅니다.

1)반세기에 걸치는 활동과정에서 총련이 이룩한 쟁취물을 분석고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반세기의 총련활동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총련은 지난 50년동안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 활동하여 왔습니다.

총련은 첫째로 조국이 분단되고 그것이 장기화된 조건에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는것입니다.

조국의 분단은 북남간의 대립, 대치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은 동포조직과 동포사회의 분단과 대치의 요인의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조국이 분단된 상태는 총련의 활동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있으며 내외반동들은 그것을 기회로 탄압과 차별을 강화하려하고있습니다.

또한 조국분단의 장기화는 세대교체와 더불어 날이 지날수록 동포들속에서 조국과의 거리를 두는 현상을 질게 하고있다는것입니다.

둘째로 총련의 소재지인 일본은 당국자들이 시종일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시정책, 비우호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그 연장선우에서 총련 탄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있다는것입니다.

일본당국은 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그리고 총련이 결성된 이래 일관하게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총련을 《파방법》용의적용단체로 지목하고 감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하여왔습니다.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과 차별시책은 총련운동전반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일본당국의 공화국적대시정책의 배경에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과 극동전략, 조선영구강점정책이 근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촉하에 남조선당국자들도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그에 추종한 변절타락분자들의 책동도 계속 되고있습니다.

셋째로 동포들의 일본거주가 장기화되면서 동포들의 세대교체가 촉진되고 그들의 조국귀속의식이 약화되는 등 운동의 주체가 부단히 변화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세대교체는 어디에서나 있을수 있는 현상이며 피할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세대교체과정에서 선행세대에 비하여 그 후의 세대속에서 조국의식, 민족의식의 회박화경향이 표면화되고 거주지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것은 면할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속에서 해외동포단체에 의거하여 살기 보다는 거주지의 행정과 생활에 종속되어 리변적으로 살아나가려는 경향이 현저화될수 있습니다.

총련의 활동의 주객관적조건은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시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의 조건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활동하고있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직재적으로 말하면 총련은 사면팔방으로 포위된 대단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운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2)반세기에 걸치는 총련활동에서 이룩한 쟁취물은 총련조직과 그 활동내용 그리고 그것을 담보하는 인재의 존재이다

(1)총련이 반세기에 걸치는 활동과정에서 이룩한 쟁취물은 첫째로 민족적애국운동을 힘있게 추진하는 강력한 조직과 그 사업체계를 확립한것이다. (조직건설의 견지)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는 재일동포자신이며 그들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데 재일조선인운동의 본질이 있다는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재일동포들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그것을 옹호실현하는 정치적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치적공간의 가지수와 규모는 재일동포들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좌우합니다. 다시말하여 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근본문제로 나섭니다.

총련은 조직건설의 견지에서 보면 기본조직, 계층별단체, 기능별사업체의 3가

지를 꾸리고 그것을 통일적인 조직체계에서 활동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련의 쟁취물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과 같은 《그런 해외교포조직은 세계에 없다》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신것은 민족적애국운동을 수행하는데서 요구되는 조직이 다 갖추어져있다는 평가의 말씀이라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총련은 재일동포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일생을 끝맺을 때까지 보살펴줄수 있는 동포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2)총련이 반세기에 걸치는 활동과정에서 이룩한 쟁취물은 둘째로 민족적애국위업에 상응하게 활동을 조직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것이다.바로 그 자체가 쟁취물이다.(활동내용의 견지)

총련이 민족적애국운동과정에서 이룩한 업적과 성과 즉 쟁취물에 대하여서는 여러 기회에 언급되어있기에 골짜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총련의 활동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취물은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수많은 인재를 교육교양해온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별과 탄압책동을 물리치고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확대하여온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룡성번영을 위하여 지리적조건을 활용하여 기여해온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당,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인민들과 세계각국인민들과 민주단체들과의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하여왔다는것입니다.

(3)총련의 쟁취물은 셋째로 애국적이고 열성적인 유능한 인재가 수없이 육성하였고 그들을 망라하고있다는것이다.

총련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기활동을 전개하여왔고 앞으로도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밑천은 자체로 교양육성한 인재가 있다는것입니다.

총련조직에는 충성심과 동포애를 안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으로 사업하는 몇십명도 아닌 수천명을 이루는 전임일군집단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일군집단이 자신의 부귀영화나 사리사욕을 바라지 않고 자기 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조국애,민족애,동포애를 신조로 활동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일조일석

에 이루어질수 없으며 지시와 명령으로 형성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총련의 가장 큰 쟁취물은 전임일군집단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누리면서도 총련의 민족적애국위업을 위하여 로력도 시간도 재산도 아낌없이 바치면서 총련사업에 물심량면으로 기여하여 온 열성자집단, 동포집단이 있다는것입니다. 군중지반의 공고성은 조직의 주체력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련이 어려운 조건이지만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올수 있었던것은 애국적이고 리해있는 광범한 동포대중이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조직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으나 바로 총련이 반세기의 활동에서 이룩한 가장 큰 쟁취물은 애국적이고 동포애에 넘친 충직한 일군, 열성동포집단을 가졌다는것입니다.

실로 총련이 반세기에 걸치는 활동과정에서 획득한 쟁취물은 세계해외교포 운동에서 류레드문 성과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총련조직이 있으므로 하여 재일동포들이 이국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살면서도 조선사람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살고있으며 재일동포사회를 형성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입니다. 이와 함께 총련조직이 있으므로 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한 숭고한 사업과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각국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에서도 보람있게 기여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2.총련이 50 년간의 활동에서 이룩한 귀중한 교훈은 총련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고귀한 담보이다.

총련은 반세기에 걸치는 활동과정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하여 총련은 조직건설사업, 사상교양사업, 민족적애국운동과업집행과정에서의 얻은 경험과 교훈,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생활을 체험한 사람들과의 사업의 경험과 교훈 등을 다양하게 이룩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훈을 세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반세기에 걸치는 총련의 교훈은 무엇보다도 운동의 주체를 확립하고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총련의 결성경위와 반세기에 걸치는 역사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조국의 광복이후 조련활동을 거쳐 민전시기의 활동과정에서 한때 존망의 위기상황에 놓였습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위대한 주석님의 주체적로선전환방침을 구현한 결과 총련을 결성하고 운동을 오늘까지 조직전개할수 있었습니다. 총련결성에서 중심문제는 주체확립이며 그것은 지도사상과 령도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다시말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전개해왔다는것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적해석도 남의 나라당의 지도리념도 아닌 주체사상에 의하여서만 올바르게 전개될수 있었다는것입니다. 또한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해외동포운동의 령도의 담당자를 누구로 보는가하는 운동존망과 관련되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총련의 반세기의 교훈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끄는 민족의 령수의 지도밑에서 해외동포운동도 조직전개되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총련의 활동과정을 거쳐 해외동포운동에서 주체확립의 필요성과 그 본질적 요구 등에 대하여 정면에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동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로서의 존재방식,활동방식에 대하여 보다 깊은 파악이 요구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국에서 이룩한 경험이나 사업방법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화하는것이 제기되어있습니다.

(2)지난 반세기의 총련의 교훈은 일군들과 동포들이 조직두리에 굳게 뭉쳐 단결하여나갈 때 반드시 전진과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실태와 역사적경위를 고려하여 선사해준 권리는 하나도 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권리,조국왕래의 권리,제 3 국에로의 여행의 권리, 민족교육의 권리를 비롯한 제반 권리의 쟁취과정은 단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실례입니다. 재일동포들이 향유하고있는 제반 권리는 총련이 동포들의 요구에 맞게 투쟁대책을 세

운데 기초하여 일군들과 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쟁취한 권리입니다.

1998년 9월이후 특히 2002년 9월이후 총련을 둘러싼 환경은 한마디로 결성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전진할수 있는것은 일군들과 동포들이 일심단결하여 굳세게 투쟁한 결과입니다. 조직의 《사수보존》, 《정면돌파》라는 짧은 말에 담겨진 심원한 뜻은 반공화국, 반총련, 반재일조선인의 광풍이 휘몰아쳐도 오직 총련을 사수하고 민족적애국 위업을 성사시키려는 일군들과 동포들의 드넓지 않은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며 특히 단결된 힘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지난 기간의 활동과정에서 단결의 중요성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으면서도 총련사업에서의 단결의 구조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어왔습니다. 단결의 조직적 중심에 관한 문제, 민단, 미조직동포들과 일본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을 조직두리에 묶어세울 문제, 광복의 운동과 동포조직의 단결에 관한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심화시켜야 할 문제로 나설것입니다.

(3) 반세기의 활동교훈은 현실환경의 변화와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를 감안하여 운동을 전개할 때 반드시 성과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 교훈이다.

총련사업은 기본사명에 의거하면서도 여러 요소에 따라 활동과업이 책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선혁명발전의 요구, 특히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의 요구, 미국의 세계전략, 대조선정책과의 련관속에서 제기되는 요구, 일본당국의 탄압정책과의 련관속에서 나서는 요구, 동포자신의 요구와 지향으로부터 나서는 요구 등 많은 요소들이 방침책정에 작용합니다. 특히 동포들의 가치관, 생활양식의 다양화는 동포들자신의 요구를 하나로 집대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고있습니다.

응당 선후차와 경중이 있는법이며 력량배치도 변화합니다. 또한 당면한 목전의 과업과 방대한 장기적인 과업에 따른 요구도 달라집니다.

총련의 오랜 활동과정에서 현실변화와 동포들의 요구와 지향을 중요시하여 제기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으나 그 전형은 민족교육부문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민족교육을 강화발전시키자는것은 일군들과 동포들의 일치된 요구이며 지향입니다. 레를 들어 교육내용의 개선과 관련해서 의견이 적지 않았고 그것을 적극 받아들여 구체화한 사업의 하나가 교과서의 개작사업입니다. 또한 운영

문제를 놓고는 자주학교라하여 조성금을 받아내는 사업같은것을 등한시한 시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동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직화하여 전개한것입니다. 제이아르정기관의 할인문제도 동포들의 요구가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져서 제이아르측도 동포학부모를 비롯한 동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현한것입니다.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를 받아들여 그것을 방침화하고 조직화한 사업은 많은 경우 은을 내고있고 뚜렷한 결과를 내고있습니다. 반면에 현실발전에 요구에 맞지 않거나 동포들의 지지와 이해를 얻지 못한 사업을 제기한 경우 그 집행에서 곡절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에서 애매하게 된것도 있습니다.

총련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직집행한 많은 사업중에서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조치도 동포들의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개호복지시설의 개설, 고령자들의 모임을 위한 장소의 설치, NPO법인화 등은 일본사회의 흐름이나 동포사회가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의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며 공감과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지난시기의 교훈은 현실발전의 변화와 동포들의 요구, 지향에 맞게 사업을 조직전개한다는데 대한 공통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다시말하여 경우에 따라 대중추종주의로 될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중무시, 동포부재의 운동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총련의 활동환경이 정보의 대량화, 다면적견해의 란립, 가치관의 복잡화 등과 함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속에서 류포되는 반총련적인 견해와 일부에 있는 무관심속에서 《현실변화》, 《요구와 지향》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종합, 판단이 요구된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총련사업앞에는 복잡하게 엉킨 문제들이 계속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치는 복잡다단한 민족적애국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총련이 획득한 생취물과 풍부한 사업경험과 귀중한 교훈은 총련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 확고한 토대로 될것입니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부장)

《총련 50 년의 쟁취물과 교훈에 대하여》

오명동

총련결성이래 50년간 총련사업을 해온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50년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들은 내외반동들의 총련조직에 대한 파괴책동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책임을 같이하는 입장을 확고히 세워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단결하여 사업하는 과정에 귀중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열매의 첫째는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의 영예를 지녀 민족적주체를 세워 떳떳이 살게 된것입니다.

총련이 결성되기전의 동포사회는 1 세, 2 세 동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동포들은 애국적이었으나 일제의 조선강점의 후파로 식민지노예사상이 심히 남아있었습니다. 총련 결성이전의 상태를 볼 때 《끼모노》를 입고 《계따》를 신고 예술단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일본신문들이 보도하는 범죤인속에서는 조선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동포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던것입니다.

귀국사업을 계기로 총련사업이 양양기에 들어섰습니다. 귀국실현과 남조선의 4.19 혁명은 재일동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나라의 복구건설에 자금이 들고 조국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어려운 시기에 멀리 떨어진 자식을 생각하시는 친어버이심정으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에 힘을 얻은 총련은 민족을 도로 찾기 위하여 동포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교또실정을 볼때 1960년대 중반기에는 1년동안에 성인학교를 통하여 1,400명이 배우고 우리 학교에서 1,700명 학생이 배우고있었습니다.

총련이 결성이래 50년간에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유치반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교육체계를 확립하여 10만여명의 동포자녀들에게 조선민족의 열과 긍지를 갖게 한것입니다.

금년 3월 현재 교또조선중고급학교에서는 5,008명을 졸업시켰습니다. 1994년에 6월에 교또부경이 불의에 총련본부를 습격하였을 때 본부를 지키기 위하여 급속히 모여든것은 우리 학교졸업생들입니다.

저는 50 년의 경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되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애족애국사업을 한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다시금 돼새기게 됩니다.

둘째로 총련은 세계해외교포조직에서는 보기드문 조직체계를 가지고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으로부터 본부, 지부, 분회에 이르는 정연한 체계를 꾸리고 각 계각층을 망라한 단체, 사업체를 가진 조직은 해외교포조직으로서는 총련뿐입니다.

셋째로 반동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오늘의 총련이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곤난한 상황속에서도 투쟁을 멈추면 패배하기 마련이며 우리에게 아무런 리익도 가져오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근 년간의 일련의 정세의 변동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곤난을 주고있습니다. 반동들은 마스메디어를 조종(특히는 랍치문제)하여 동포들을 위협하고 위축시키고있습니다.

조국에서의 《고난의 행군》, 일본에서의 바블경제의 붕괴, 민족금융기관의 파탄, 민족적차별 등의 보도들은 적지 않는 동포들을 총련조직과 거리를 멀게 하는 가슴아픈 현상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반동들은 50 년 동안 우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생각하여 우리를 탄압하려고 날뛰었습니다. 재류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내고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법안을 가지고 우리를 탄압하려고 획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때마다 강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그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쳤습니다.

넷째로 일군들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총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담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상이몽》은 조직과 동포들에게 아무런 리익도 가져오지 않을것이며 백해무익입니다.

정세가 어렵고 험악할수록 신념이 흔들리고 변절타락분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조국, 민족과 운명을 같이하는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양보할수 없는 기본원칙이며 핵을 이루는 교훈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비판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과 같으며 조직의 활성화도 발전도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중상비방은 구별해야 하며 조직과 개인을 헐뜯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책임을 같이하는 립장에서 의논하고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책을 강구하면 될것입니다. 제기된 의견이 정당하면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것입니다.

조직의 규률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망하며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이는 50년간의 사업을 통하여 얻은 또하나의 귀중한 교훈입니다.

다섯째로 동포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동포대중의 리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업하는 기풍을 세워 사업하여야만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입니다.

방침이 정당하고 일꾼들이 투신하면 동포들은 행동에 나섭니다. 동포들은 일을 며칠간 쉬고 빚을 지더라도 돈을 내고 조직을 강화발전시켜 조국통일사업을 비롯한 총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당한 우리의 위업에서 동포부재상황의 운동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오늘 동포사회의 주인공은 3세,4세입니다. 1세,2세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었던 시대와는 환경과 조건이 다릅니다. 동포들은 고학력이고 넷트사회는 순간에 정보를 수집할수 있습니다.

의식에 변혁없이 동포들을 묶어세울수 없습니다. 젊은 일꾼들은 1세,2세가 남긴 재산을 밑천으로 IT 시대에 맞는 금후의 운동을 내다보고 방법론과 활동방식을 많이 연구해줄것을 기대하면서 보충토론을 마치고있습니다.

(사협교또 회장)

총련의 애족애국업적과 재일동포들의 미래

제 2 부

동포사회의 변화와 새 단계

재일조선인운동의 과제 및 대응책

사회자: 강일천

썰 마		보고자	토론자
썰마 4	새 세대와 민족성	박재훈	신영근
썰마 5	현단계 재일조선인운동의 권리옹호과제	박삼석	김동학
썰마 6	새 환경에 대응한 동포경제활동	리평태	럼귀성



(보고)

《통계를 통해서 보는 새 세대동포들의 민족성》 -총련산하 새 세대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 Identity의 현주소-

박재훈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속에서 재일동포들 특히는 새 세대동포들속에서 민족성이 희박화되어가고 있다는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의 일본에로의 《동화》의식의 심화를 느낄수 있으며 그것이 새 세대 동포들속에서 더욱 심화되어있다는것을 실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의식은 1970 년대로부터 즉 1 세로부터 2 세에로 세대가 교체되면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30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재일동포사회의 주역은 이제 3 세, 4 세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시말하여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있는 《동화》경향도 3 세, 4 세가 주동하고있습니다.

새 세대들이 주동하는 일본《동화》경향은 이전세대의 그것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조건과 환경에 기초하여 그 나름의 논리로 진행되고있다고 가정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운동을 벌리자고 할 때 과거 1970 년대에 나타났던 일본《동화》경향에 경종을 울리고 비판하였던 논리와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벌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사는 재일동포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올바른 처방과 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울것이 절실히 요구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일동포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3 세, 4 세대동포들의 의식동향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것입니다.

본론은 재일동포 3 세, 4 세중에서 총련산하에서 배우거나 활동하는 새 세대동포들에 대한 앙케트조사자료를 통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성)의식의 현주소를 단편적으로나마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1.통계를 통해서 보는 《재일동포》현황

1) 《70 만 재일동포》라는 허구

21 세기에 들어선 오늘, 재일동포사회는 해방직후와는 크게 다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새 세대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법무성을 비롯한 일본 관공청에서 발표되는 각종 통계를 통하여 재일동포들의 현황에 대해서 개괄합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발표에 의하면 2003년말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외국인등록상 국적란에 《조선》 및 《한국》이라고 표기되어있는 재일동포¹⁴의 총수는 61 만 3 천 791 명¹⁵입니다.

해방후 공화국에로의 귀국사업이 활발히 벌어진 시기를 제외하고 일관해서 증가세를 보이고있던 재일동포수는 1991년말의 69만 3천50 명을 정점으로 하여 1992년부터는 감소경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61 만이라는 수자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일동포》들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것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기 통계에는 요즘들어 늘어나고 있는 해방후 남조선으로부터 새롭게 일본에 건너온 재일동포들(소위 《New Comer》)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재일동포들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결과 일본에 이주하게 된 역사적경위를 가진 사람과 그 자손들, (소위 《Old Comer》)의 대부분은 일본법률상 《특별영주자》로 분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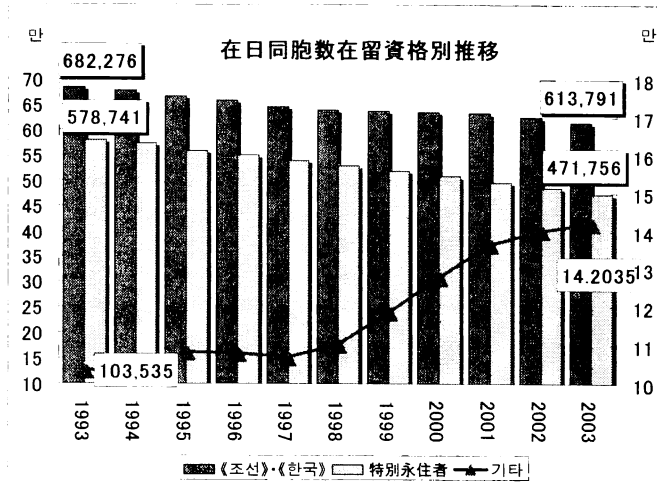
통계에 의하면 2003 년말현재 그 수는 47 만 1 천 756 명으로서 2001 년에 50 만명선을 끊어 해마다 1 만명씩 감소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조선》 및 《한국》 표기자는 전체 재일동포의 76.9%에 지나지 않으며 앞

¹⁴ 외국인등록의 국적란에 《조선》 및 《한국》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것과 그 사람의 국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이다는것과는 구별된다. 해당인의 국적은 그가 귀속하는 국가에서 부여하는것이지 현재 거주하는 나라(여기서는 일본)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선> 및 <한국> 표기자》라는 표현을 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在日本朝鮮人人權協會編『同胞の生活と權利Q & A』(1999 年) 를 참조

¹⁵ 法務省入国管理局홈페이지, <http://www.moj.go.jp/PRESS/040611-1/040611-1.html> 참조

으로도 이 경향은 계속 될것이 예견됩니다. (그림 1)

그림 1



출처: 法務省入国管理局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를 참조하여 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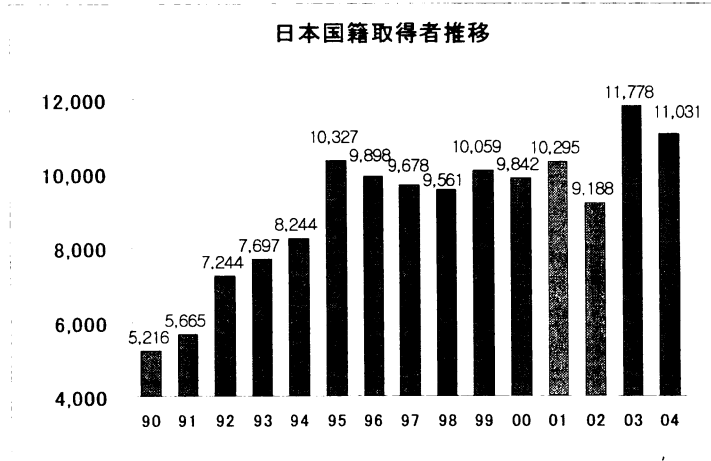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는것은 《70 만 재일동포》란 표현을 쓰기 시작한 같은 시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재일동포들은 증가가 아닌 감소경향이 현저하게 되었으며 2000 년대이후 그 경향은 가속적이라는것입니다.

2) 《재일동포》격감의 원인

이러한 《조선》및 《한국》표기 재일동포들의 격감은 무엇에 기인한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일본국적취득자의 증가입니다. 통계상 1952 년부터 2004 년 까지사이에 일본국적을 취득(귀화)한 동포총수는 루제 27만 6천 54 명입니다. 그중 2004 년에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수는 1 만 1 천 31 명이였습니다. 1995 년에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수가 연간 1 만명을 넘은 후 해마다 약 1 만명의 동포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것은 1990 년이후 일본국적취득한 사람이 13 만 5 천명으로 총수의 49.1%를 차지한다는것 즉 일본국적취득자의 급증은 1990 년대이후의 경향이라는것입니다. (그림 2)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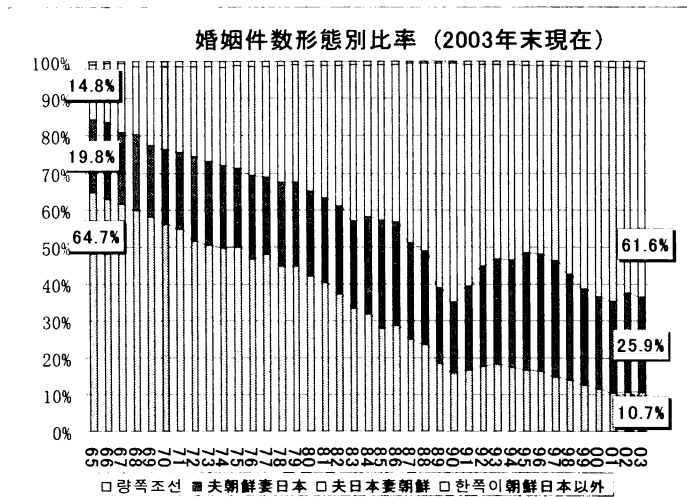


출처: 法務省入国管理局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를 참조하여 필자작성

《조선》 및 《한국》 표기 재일동포들의 격감의 요인은 다음으로 일본인배우자와의 혼인의 증가와 그 결과로서의 일본국적출생아의 존재입니다.

2003 년도 재일동포의 혼인 계출건수(婚姻届出件数)는 총 8 천 630 건입니다.

그림 3



출처: 厚生労働省홈페이지 (<http://www.mhlw.go.jp/index.html>)를 참조하여 필자작성

그중 민족결혼은 10.7%(949 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 비해 일본인과의 혼인건수는 87.5%(7 천 553 명)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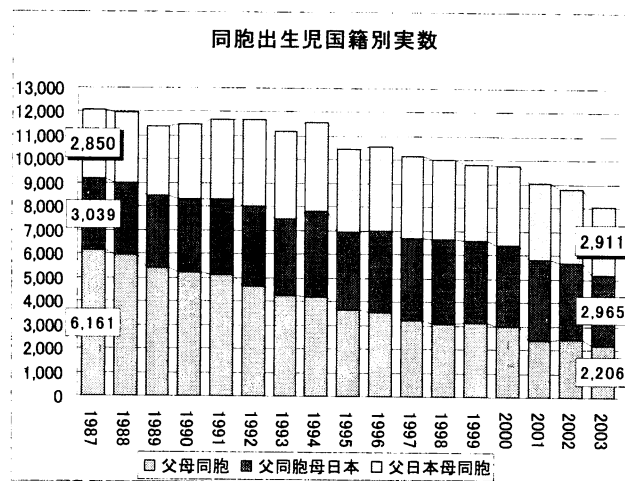
일본인과의 혼인내역을 보면 남편이 일본국적인 경우가 61.6%(5 천 318 명), 처가 일본국적인 경우가 25.9%(2 천 235 명)이며 기타 외국인하고의 혼인이 1.5%(128 명)입니다. (그림 3)

과거 10년간의 혼인건수의 추위를 보면 민족결혼비율의 감소, 일본국적소유자와의 혼인비율의 증가경향을 알수 있으며 특히 동포녀성과 일본남성의 혼인비율이 증가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재일동포출생아들의 피출 및 국적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03 년현재 량친의 국적표기가 둘다 《조선》, 《한국》인 출생아는 2 천 206 명으로서 《조선》, 《한국》 표기자의 자녀총수 8 천 82 명의 27.3%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2.7%(5 천 876 명)가 부모의 일방이 일본국적인 소위《다블》로 되는 출생아입니다. (그림 4)

그림 4



출처:厚生労働省홈페이지(<http://www.mhlw.go.jp/index.html>)를 참조하여 필자작성

문제는 재일동포자녀들의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재일동포와 일본인 배우자간에 태어난 자녀들의 국적표기입니다.

일본당국은 1984 년에 국적법을 부계주의(父系主義)로부터 부모양계주의(父母兩系主義)로 개정하여 재일동포와 일본인배우자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1985 년이후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동포신생아의 70%이상에게 일본국적이 부여되었으며 1985

년 이후 그 수는 루게 11 만 8 천 889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국적법개정 이전이라면 《조선》, 《한국》 국적표기자로 되었을 동포자녀 6 만 2 천 685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 것처럼 《조선》, 《한국》 표기 특별영주권자(이하 《재일동포》)들의 감소는 재일동포사회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경향들의 결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총련산하 새 세대동포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성)의식

여기서는 2003년에 총련산하 새 세대동포들 2천 413 명으로부터 얻은 앙케이트조사자료를 참고로 새 세대 동포들의 민족(성)의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민족(성)의식의 경향

앙케이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새 세대동포들의 민족(성)의식은 기존의 척도로 재여볼 때 희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세대동포들의 민족(성)의식의 경향을 몇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민족성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징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자들은 민족성을 나타내는 첫째가는 징표를 묻는 질문에 《우리 말》(28.4%), 《이름》(22.7%), 《피줄》(19.4%), 《국적》(12.9%)의 순서로 골랐습니다.(표 1) 그러나 가장 많은 《우리 말》도 3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도 그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표 1)

표 1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종합 및 연령층별)

	종합	30, 40 대	20 대	10 대
말	28.4%	22.3%	26.4%	31.1%
이름	22.7%	18.6%	23.2%	23.1%
피줄	19.4%	19.5%	19.3%	19.2%
국적	12.9%	22.7%	13.7%	10.6%

응답자의 90%이상이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말이자 곧 민족》이라는 사상이 민족교육과정을 통하여 강하게 영향을 준 결과일 것이라는것은 쉽게 상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것도 자신의 민족(성)의식을 표현하거나 확인하는 절대적인 척도로 생각되지 않는다는것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새 세대들의 민족(성)의식의 경향은 둘째로 국적에 대한 의식의 변화 즉 민족=국적이라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있다는것입니다.

기존세대들이 민족(성)의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였던 《국적》에 대한 인식이 새 세대들속에서는 크게 바뀌어지고있습니다.

상기 설문에서 민족을 나타내는 징표로 《국적》을 첫째로 택한 비율은 전체의 12.9%로 다른 징표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있다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해지고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적관》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은 국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민족성의 징표》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40%에 달하지 않으며(37.8%) 《구매되지 않는다(こだわらな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2%나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연령대별 차이가 커 30~40 대에서는 50%를 넘으나(52.7%) 10 대에서는 30%에 지나지 않습니다(31.8%).

《국적》과 민족성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은 일본국적취득과 관련한 설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일본국적취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모든 세대에서 가장 많으나 그 비중은 연령이 내려감에 따라 점점 떨어져나가고있습니다.

일본국적취득의향을 물어보는 질문에 64%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너무 생각안한다》, 《어느쪽이라도 좋다》고 답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있습니다. (표 2)

표 2 일본국적취득에 대하여

	종합	30, 40 대	20 대	10 대
전혀 생각 안한다	64.0%	69.5%	73.7%	56.2%
너무 생각 안한다	18.5%	20.0%	14.4%	21.2%
어느쪽이라도 좋다	11.5%	11.5%	11.5%	11.5%
될수 있으면 취득	2.2%	1.4%	1.3%	3.0%
반드시 취득	0.6%	0.5%	0.8%	0.5%

이러한 경향은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 10대의 응답자는 《전혀 없다》가 56%,로 응답자중 가장 낮고, 《어느쪽이라도 좋다》가 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족의 징표이기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32.8%로 가장 많기는 하나 《생활상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30.9%)과 거의 비슷하며 10대에서는 그 순위가 역전(《민족의 징표》:30.8%, 《생활상불편없음》:34.6%)되어 있습니다.(표 3)

표 3 취득안하는 이유

	종합	30,40 대	20 대	10 대
민족의 징표이기때	32.8%	39.9%	33.7%	30.8%
차별에 굴하기때문에	19.4%	15.8%	21.4%	18.3%
생활상 불편이 없기에	30.9%	29.4%	26.6%	34.6%

이것은 종래의 국적을 민족(성)의식의 징표로 보고 《민족성고수=국적고수》라는 등식을 당연한것으로 여겨왔던 종래의 통념이 새 세대들속에서는 먹혀들어가지 않음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새 세대들의 민족(성)의식의 경향은 셋째로 민족(성)의식에 대한 실용주의적접근입니다.

민족성의 징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우리말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강하게 느낀다》, 《어느 쪽이나 하면 느낀다》는 대답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80%이상에 달하였습니다.(표 4)

표 4 우리 말의 필요성

	종합	30,40 대	20 대	10 대
강하게 느낌	52.8%	58.2%	63.5%	44.3%
느낌	33.9%	31.8%	26.0%	40.0%
(계)	86.7%	90.0%	89.0%	84.3%

그러나 그 이유를 물어보면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답(42.8%)과 함께 《재일동포로서의 특질을 살린다》는 답(34.9%)을 고르는 비율이 많으며 그 비율은 연령이 내려감에 따라 가까워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표 5)

이것은 새 세대들이 가지고있는 민족성에 대한 인식이 《지킨다》는 방어적인 인식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것을 《살린다》는 공격적인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성을 자기의 실리와 결부시켜 생각하려는 실용주의적인 의식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표 5 우리 말이 필요한 이유

	종합	30, 40 대	20 대	10 대
민족성고수	42.8%	48.8%	44.3%	40.4%
특성 살린다	34.9%	28.8%	34.4%	36.5%
려행 등	6.1%	5.0%	5.1%	7.2%

우리는 앙케트를 통하여 새 세대들이 가지는 민족성은 지난 시기 1 세, 2 세들이 지니고있었던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것이며 보다 폭넓고 복합적인것으로 되어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민족성을 그것을 억누르고 없애자고 하는 세력과의 대립속에서 간직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짐으로써 현재보다도 더 밝은 미래를 펼칠수 있다는 《자기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직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볼수 있을것입니다.

2)새 세대들의 민족(성)의식변화의 요인

새 세대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의식변화의 원인은 몇가지로 정리할수 있을것입니다.

새 세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의 원인은 첫째로, 가정에서의 민족(성)교육의 약화와 생활양식의 《일본화》의 결과입니다.

응답자들이 민족적영향을 받은 곳은 《학교》(42.7%), 《가정》(31.1%)이나 《가장 크게 받은 곳》이라는 설문에서 《가정》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6.8%에 그쳤습니다.

응답자들중 조부모의 도항리유에 대한 인지정도를 보면 《상세히 알고있다》고 대답하는 비율은 종합적으로 22.6%에 지나지 않으며 연령이 내려감에 따라 그 비율이 떨어지고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도일리유는 각자가 다른것이여서 가정교육과 밀접히 관련되

는 내용이라고 볼 때 가정에서의 민족교육의 약화의 척도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새 세대들이 자란 가정생활이 세대교체에 따라 《일본화》 되어나간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기념일이나 행사 등을 어떻게 지내는가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제사를 비롯한 민족적인 행사를 경험한 비율이 30~40 대에서는 83.7%인데 비해 10 대는 63.2%로서 연령과 함께 그 비율이 저하되는 반면에 일본식행사를 경험한 비율은 30~40 대에서 13.9%인데 비해 10 대에서는 34.6%로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에 있다(표 6, 7)는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표 6 돌잔치 등 민족행사 참가경험

종합	30, 40 대	20 대	10 대
68.9%	83.7%	72.7%	63.2%

표 7 初詣、七五三 등 일본식행사 참가경험

종합	30, 40 대	20 대	10 대
29.2%	13.9%	21.3%	34.6%

그것은 둘째로, 해외거주 3 세대, 4 세대가 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필연적 결과라는것입니다.

민족적 학대와 차별을 받으며 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활할수밖에 없었던 1 세, 2 세들과는 달리 그들이 마련해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자란 새 세대 3 세, 4 세들은 선행세대보다도 한단계 높은 요구를 가지게 된것입니다.

즉 일본사회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신을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사회적지위향상》의 요구, 또한 자기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발휘하여 자기 성장을 바라는 《자기실현》의 요구입니다.

또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애국심으로 발양된 1 세들의 민족성, 일본에서의 갖은 민족적 차별과 학대에 대한 반항, 그와의 대결을 통하여 싹트고 키워진 2 세들의 민족성과는 달리 로골적인 민족차별이 자취를 감추고,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땅보다 자기가 나서

자란 《지역》에 애착을 느낄수밖에 없는 3 세, 4 세들의 민족성은 그 필요성 자체에 물음표가 붙어오는것으로 되어오는것입니다.

그 원인은 셋째로, 민족(성)의식에 대한 여러가지 사상조류들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1970 년대에 《제3 의 길》, 《재일론》으로 불리웠던 흐름은 일본의 다양한 사상조류, 재일동포들의 다양한 지향성을 반영하여 최근 들어 《시민사회》를 추구하는 운동론이나 조일량측의 민족주의를 극복하여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운동론, 또한 본국과 인연을 끊고 일본사회의 《소수민족》으로, 혹은 적극적인 귀화를 통한 《조선계일본국민》으로 살아나갈것을 제창하는 등 다양한 모양을 띠고 주장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일본의 환경속에서 민족(성)의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새 세대들에게 일정하게 받아들여지고있다는것입니다.

그 원인은 넷째로, 기존의 민족단체가 새 세대들의 의식변화에 상응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새 세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도 새 세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힘을 돌리지못하였으며 그 결과 자신의 운동을 그들의 요구에 맞게 전환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새 세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여러 경향에 대한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한 속에서 그들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고려함이 없이 선행세대들에 대했던것과 비슷한 처방을 가지고 운동을 벌임으로써 그들에게 민족(성)의식을 고수한다는것이 자기지향을 억누르는것, 자기생활과 결부되지 않은 《까다로운것》이라는 인상을 일부 주게되었습니다.

3)새 세대들의 민족(성)의식에 대한 평가

이상 본것처럼 앙케트조사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것은 새 세대들의 민족(성)의식은 확실히 상실해나가고있다는것입니다. 특히 총련의 영향밖에 있는 새 세대들의 민족(성)의식상실정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되듯이 일본국적취득자가 요즘 들어 연간 1만명수준으로 고착화되어 나가고있는 현실은 몇십년후에는 대부분의 재일동포가 《조선계 일본국민》으로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민족(성)의식상실의 가속화와 더불어 새 세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경향은 민족(성)의식을 자신들의 《사회적지위향상》, 《자기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리용》하자는 경향입니다.

요즘 생활상 편리를 위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하면서도 일본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개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민족이름을 쓰는 경우가 나타나고있는것은 그 좋은 실례입니다.

이런 경향은 새 세대들이 민족(성)의식을 실용주의적으로 접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것은 이러한 경향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온 총련영향하의 새 세대핵심들속에서도 나타나고있다는것입니다.

새 세대들이 가지고있는 민족(성)의식은 1 세, 2 세들의 그것과는 다르게 생활상 필요에 따라 생길수도 있고 없어질수도 있는 상당히 불안정한것으로 되어나가고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속한 《민족》이나 민족(성)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동포사회, 총련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성》, 대가 없는 《자기희생》을 거부하며 자신의 《사회적지위향상》, 《자기실현》을 집단적인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자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앙케트결과를 통하여 총련산하 새 세대동포들속에서 민족(성)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앙케트조사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었던것은 총련조직의 영향을 받아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새 세대핵심들은 《민족성》을 《사회적지위향상》과 《자기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조국, 민족 그리고 동포사회와 결부시켜 생각하자는 지향성을 함께 가지고있다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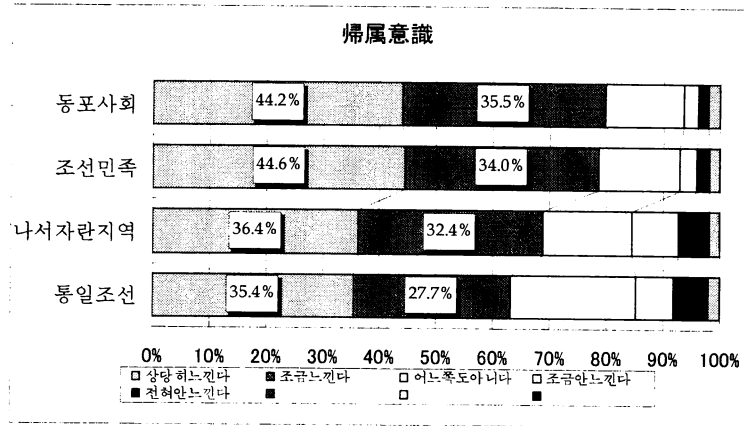
《당신이 귀속의식을 느끼는곳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중 약 80%가 동포사회, 조선민족에 귀속의식을 느낀다고 대답하고있습니다.(그림 5)

그들은 자신이 의식을 하든 안하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애국의 1 세, 2 세들이 투쟁을 통하여 지켜온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혈통은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항하자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있습니다.

총련산하 새 세대청년들이 동포사회, 조선민족에 대한 귀속의식을 바탕으로 가지고있다는것을 전제로 생각할 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성)의식에 대

한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림 5



그들은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서 자기의 꿈, 희망을 일본이란 좁은 틀에서가 아니라 일본사회, 나아가서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나갈것을 꿈꾸고있는것으며 그것을 《재일조선인으로서의 프라이드(pride=자존심)》라는 말로 표현하고있습니다.

새 세대핵심들속에서 볼수 있는 이러한 민족적 존엄과 자존심은 아직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성숙된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으나 민족의 한성원으로서 살아나가자는데서 대단히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있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총련의 지도밑에 진행되어 온 민족교육사업이 하나의 열매로 익어가고있는 결과이며 우리는 새 세대핵심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좋은 싹들을 옹기 보고 거기에 부단히 긍정적영향을 주어 키워주어야 합니다.

3.몇가지 제언

이상 앙케트조사에 기초하여 총련산하 새 세대동포들의 민족(성)의식의 경향과 그 원인, 그리고 그를 어떻게 볼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자고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민족(성)의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그를 위한 연구사업

을 벌린다는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성을 고수, 발전시키는 운동을 새 세대들의 지향성을 실현시키는 운동과 옹게 결부시켜 벌려나가자면 《민족》개념을 그들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앞서 본것처럼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민족(성)의식이란 기존의 국가나 피출, 언어 등의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는 단순한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피출과 국적을 볼 때 일본인과의 혼인이 태반을 차지하게 된지 오래고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동포수가 해마다 1만명을 헤아리는 현 상황은 《민족》개념을 기존의 1 세, 2 세적인 기준에 따라 론할것이 아니라 3 세, 4 세의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그에 기초한 운동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재일동포들의 현실로부터 출발한다는 원점을 재확인하면서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을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하여야 할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광의의 민족교육을 재일동포들의 현실에 맞게 발전, 풍부화시키는데 힘을 넣는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재일동포들의 력사적동질성회복을 위한 폭넓은 계몽활동을 벌린다는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 발생한 재일조선인문제의 당사자인 재일동포가 자신의 력사적존재를 자각함으로써 자신이 직면하고있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도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을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 풍부화시켜 학생들의 민족적자각을 키워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일동포들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일본학교재학, 출신자들에게 민족의식을 안겨주고 올바른 력사인식을 안겨주는 기회와 마당을 적극적으로 제공할것이 절실하게 요구될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력사적배경을 같이하는 일본국적소유자들에게도 그 문호가 개방되어있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조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지는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재일동포들은 국가의 틀을 벗어나 그를 초월한 존재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이야기되고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는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주장은 현재의 재일동포들이 놓여진 상황을 볼 때 현

실성이 없는 주장이고 봅니다.

일본인의 의식속에서 국가란 존재가 희박해지고 탈국가적경향이 짙어지고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적지않은 재일동포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재일동포들앞에는 일본이 국가로서 일으킨 식민지배라는 범죄를 국가로서 사죄하지 않고있다는 현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적의사를 가지고 구식민지후손인 재일동포들에게 민족적동화를 강요하고있다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 재일동포들이 누리고있는 제반권리가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인것이아니라 재일동포들자신이 조국의 열렬한 지지와 지원속에서 쟁취한것이라는 현실을 보아도 알수 있을것입니다.

조국과의 련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지는 것은 또한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의식을 확고하게 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하여 재일동포들이 지니고있는 민족성은 조선반도에 그 뿌리를 둔것이며 그것을 지키고 풍부화하자면 그 뿌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빼놓고는 생각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아무리 재일동포들간의 커뮤니티를 잘 꾸리고 민족교육을 잘하였다고 하여도 조국과의 련계를 멀리하거나 꺼린다면 일본생활의 장기화, 정착화로 하여 점점 희박해질수밖에 없는 민족(성)의식을 보완하는 길이 막히게 되며 《재일》조선인만의 독특하고 외곡된 《민족(성)의식》이 나오게 될뿐일것입니다.

우리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의식문제를 일본이라는 지역에 극한시켜 사고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할것이아니라 재일동포들의 력사를 조국현대사의 부분사로서 자각하고, 력사적 6.15 공동선언이후 열리게 된 통일시대의 커다란 민족사적흐름속에 자신의 존재를 련동시켜 나감으로써 진정한 민족(성)의식의 고수, 발전의 길을 모색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체계적인 민족교육과정을 통하여 민족(성)의식을 키워왔으며 자기가 자라온 동포사회에 대한 애착과 민족(성)계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있는 새 세대동포들이 존재합니다. 해외동포 3 세대, 4 세대라는것을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적성과이며 자랑입니다.

우리앞에는 이러한 귀중한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자부심을 가슴속에 간직하

면서 그와 동시에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 요인을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그 역사적교훈을 살려 현실을 타개해나갈것이 절실히 그리고 시급히 요구되고있습니다.

본 론고가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창조해나갈 새 세대동포들의 의식을 리해하고 그들에 의거하여 새로운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를 창조해나갈 론의를 깊여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사협중앙 리사, 조선대학교 강사)

《재일조선인의 민족성회복의 본질과 타당성》

신영근

주지되는바와 같이 《일본》에서 《조선민족》을 지켜나간다, 이어나간다는 것은 이른바 《사람은 자기의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하는가 어떤가》와 같은 일반적론의에 해소하지못할 사회력사적배경과 정치적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할 민족성의 실체는 무엇인가》는 질문의 대답 역시 고정불변한 한가지 리상적해답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일본에 의한 선강점과 식민지동화정책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또 오늘날도 계속 문제의 화근이 온존되어있을뿐만아니라 오히려 심화되어가고있다는 사정에 기인합니다.

이하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재일조선인의 립장에서 보면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성은 일본에 의하여 억울하고 부당하게 《빼앗긴것》이었으며 인간으로서 응당하게 《회복되어야 될것》이었습니다.

일본측에서 보면 재일조선인의 민족성문제는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며 그 청산을 외면하고있는 《현재》를 비치게되는 문제의 첨예성으로부터 《계속 없애치우고 싶은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해방후 재일동포들은 민족성의 회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요구로 내걸고 투쟁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일관한 차별과 동화, 탄압으로 대항하여왔습니다.

일본정부의 반종련,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에 상징되듯이 재일조선인의 민족성회복에 담겨져있는 이와 같은 정치적본질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리해나 인식정도와는 무관계하게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족》인이란 리유로 하여 민족성회복의 권리가 일본에 재류하는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 상당히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일뿐만아니라 일본의 변치않는 정치사조의 표현이며 군국주의부활과 아시아재침의 위험성을 암시하는 싹이라고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일조선인들이 민족성회복을 추구하는 지향성 그 자체는 오늘날도 보편적인 의의와 타당성을 가지며 결코 시대착오적인것이 아닙니다.

다.

한편에서 박탈의 당사자로서의 1 세 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귀속의식이나 자부심과 같은 정신적인 것이든 또는 언어나 풍습과 같은 문화적인 것이든 그것은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있던것》을 도로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복할 내용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 세동포들의 민족성회복운동은 《생활밀착형》이며 《원상복구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세이후의 동포들에 있어서는 민족성을 회복한다는 행위나 그 지향성의 정당성은 느끼면서도 자기들이 회복해야 할 민족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체로서 체현한 경험이 1 세들에 비하여 빈약하거나 또는 없는데로부터 이른바 민족성의 《1 세모델》에 기초하여 그것을 고수하고 자기것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거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 세들의 민족성회복운동은 《리념선도형》이며 《계승·체특형》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3 세 이후의 재일동포들에 있어서 민족성의 회복은 일본정부의 끈질긴 차별, 동화정책과 개인주의적가치관의 사회적류포의 결과로 《계승할 민족성의 내용》과 더불어 《민족성계승의 의욕》마저도 다같이 희박화되어가는 어려움속에서 그 내용과 의의를 부단히 검증하면서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3 세, 4 세들의 민족성회복운동은 《리념추구형》이며 《발굴·섭취형》 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3 세, 4 세들에 있어서 민족성을 회복 또는 고수하는 《리유》와 그들이 획득 또는 계승하려는 《내용》, 그리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형태》는 결코 한가지가 아니며 그것은 걸잡을길 없이 날로 다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이 어떤 리유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추구하든지간에 그것이 《민족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한에 있어서 거기에 관통되는 정치적본질과 그것이 가지는 의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시기 재일동포들의 민족성고수문제에 대하여 논할때 이와 같은 《현상》과 《본질》의 호상연관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며 《개개의 현상》으로서의 모든 민족성유지, 회복의 움직임을 그 본질에 접근시켜 보다 의의가 큰 것으로 이끌어내갈 문제의식을 가질것이 요구되고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조교수)

《현단계 재일조선인운동의 권리옹호과제》 —재일조선인의 권리옹호,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망—

박삼석

오늘 재일조선인의 권리옹호운동은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한편에서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움직임과 그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동시에 재일조선인의 권리옹호운동을 벌려야 할 시기입니다.

더우기 새 세대동포들이 생활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운동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의 주인으로 나서고있으며 지난 50년간의 로정속에서 이룩한 총련의 권리옹호운동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보고에서는 오늘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주요과제와 대응책을 정리하고 이 문제해결의 전망을 운동론적으로 집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결성 50돐을 맞이한 재일조선인들이 총련조직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권리문제해결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권리옹호, 확대운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초보적이나마 도움을 주려고합니다.

1.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의 성격과 기초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는 일반적으로 재일조선인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문제로 됩니다. 이것은 곧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의 성격을 나타낸 개념입니다. 다시말하여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는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인간으로서의, 조선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문제로 됩니다.

재일조선인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의 권리보장문제이며 특수적으로는 력사특수 사정을 가지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일조선인들이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 외국인이기에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그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그 특수한 지위와 관련하여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력사적책임, 도덕적 책임을 지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재일조선인의 권리옹호운동에서는 이 《력사특수사정을 가지는 외국인의 권리문제》라는 권리의식이 리론실천적인 기초로 됩니다.

2.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해결을 위한 주요과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공민권을 지키고 인권, 생활권, 기업권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단행본, 10 페이지)

현단계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권리옹호를 위하여서는 몇가지 주요과제들이 나 서고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요과제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해결문제의 과제이고 둘째는 기득권의 옹호과제이고 셋째는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해결과 관련된 력사규명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 과제로 되는데는 몇가지 리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일조선인의 권리옹호운동이 적어도 총련이 결성된 이후 50년의 력사속에서 일본당국이 선사해준 권리는 하나도 없지만 총련과 그 두리에 뭉친 동포들의 권리옹호투쟁에 의하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여왔다는 실적, 업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권리와과제들이 있고 그것들은 오늘 재일조선인운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더 초점적인 문제로, 동포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있는 문제로 부각되고있습니다.

또한 재일조선인의 권리옹호운동을 둘러싼 객관적환경이 고려되여야 하며 한편에서 조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그에 제동을 걸며 역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는 환경을 고려하여 권리옹호과제를 책정해야 하기때문입니다.

1)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고 민족적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나서는 구체적과제는 교육권리보장문제, 년금문제 기업권옹호문제들입니다.

먼저 재일조선인의 교육권리보장문제입니다.

원래 재일조선인의 권리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의 보장문제가 바로 재일조선인의 교육권리보장문제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 바로 민족교육사업이며 오늘 총련의 애족애국사업의 2대중심기둥의 하나가 바로 교육문화사업입니다. 이러한 운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치에 따라 역시 권리옹호운동에서도 중요과제로 나섭니다.

더우기 주목해야 하는것은 이 교육권리문제가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해온 일본당국이 가장 집요하게 차별에 매여달리고있는 문제이라는것과 함께 특히 1990년대이후 총련과 재일조선인의 권리옹호운동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이 주동을 쥐고 련이어 권리를 확대해온 과제이기때문입니다.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적차별과 관련된 과제, 즉 교육권리옹호를 위한 구체적과제사항들을 본다면 크게는 보조금증액문제, 조선학교에 대한 기부금을 세금상 손금취급으로 하도록하는 문제, 국가자격취득문제들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급부에서 최소한 일본의 사립학교학생들에 대한 보조수준을 실현시키는것이 중요하게 나서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쿄도에 있어서 사립학교들에 대한 년간평균보조금은 1인당 소학교에서 약 24만엔, 중학교에서 약 29만엔, 고등학교에서 약 33만, 유치원은 약 8만엔으로 됩니다. 유치원은 도쿄도가 적고 전국적으로는 평균 약 15만엔으로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공립학교(2001년도)로 보면 국고에 의한 보조, 지방자치체에 의한 보조까지 합한 금액으로 소학교는 약 91만엔, 중학교는 약 100만엔, 고등학교는 약 111만엔, 유치원은 약 74만엔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보조는 도도부현, 시구의 지방자치체의 보조를 포함하여 조선학교학생 1인당 년간에 평균으로 약 8만~9만엔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국세, 지방세 할것없이 모든 세금을 일본인들과 똑같이 지불하면서도 교육권리에 대한 급부의 권리에서 배제되고있는것은 명백한 민족차별입니다. 어느 지방자치체당국에 찾아가 이야기하면 예산이 긴장되고있기에 어렵다는 말이 있으나 가령 오늘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래일 일본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그 시각부터 현재 조선학교에 주고있는 보조금의 10배이상의 보조를 무조건 실시하지 않을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

금의 차별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선학교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취급을 실현시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나쇼날스쿨 등 재일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2004 년도부터 학교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손금취급으로 되고있습니다.

조선학교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안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은 학교운영을 2 중으로 방해하고있다는 비판을 면치못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부에 대하여 그것이 손금으로 되기에 많은 동포들이 기부를 보다 하기 좋게 될것입니다.

또한 재일조선인의 교육권리와 관련해서는 조선학생들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격을 인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시기 조선대학교학생들에 대한 각종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격에서 새로운 전진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1 차시험면제, 세리사, 보육사, 사회보험로무사의 수험자격인정들입니다.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적차별과 관련하여 세부에 들어가면 적지 않는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레컨대 조선학교들의 교문앞, 통학로들에 도로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문제, 일본 소학교이면 통학로에는 도로에 통학로라는 도로표식이 있다든가, 《아동주의》란 글이 도로에 새겨져있습니다. 또한 보도분리, 운전수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도로표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대책들을 조선학교에 대하여 각종학교라는 리유로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고있는 지역이 많다는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또 조선학교들의 교의 (학교의사) , 건강진단비문제도 있습니다. 일본학교들에서는 학교근방의 개업의사들에게 학교의사를 위탁하고있는것이 일반적이고 공립학교경우 지방자치체가 일정한 수당을 교의들에게 지출하고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건강진단도 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그러한 비용도 행정 이 부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외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동포의사들이 봉사적인 활동으로 교의로 활동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시가현의 오쓰시는 시가조선초급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외에 그와 별도로 건강진단비를 내고있습니다. 이처럼 조선학교와

관련한 보전,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행정차별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일본학생지원기구(구 니혼이꾸에이카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이 기구는 일조교뿐아니라 전수학교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대여하고있습니다. 월액 장학금의 수준이 3만, 5만, 8만, 10만 중에서 선택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교 특히 고급학교들과 대학교에 대해서 각종학교를 리유로 제외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조선고급학교학생들과 조선대학생들에 대하여 일본의 고등학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준한 진학과 관련된 수험자격과 국가시험과 관련한 수험자격을 련이어 인정하고있는데 비하면 이러한 대응은 시대착오라고 할수 있으며 더구나 급부가 아니라 대여라는 차원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고있다는 의미에서 심한 인권침해로 됩니다. 앞으로 집중적인 여론환기와 당사자들의 요청활동으로 가까운 년간내의 해결이 요구되고있는 과제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 제이리구 외국인선수의 틀 (와꾸) 문제 즉 제이리구에 외국인선수들이 있는바 일본축구협회는 규정속에서 한팀에 외국인 3명이내로 되고있습니다.

재일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재일외국인선수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학교 교육법 1조에 정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것입니다. 이때문에 해당한 학생들이 일부러 통신제의 고등학교에 다블스쿨로 다녀야 한다는 부담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말그대로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적차별이 남아있으며 이를 시정해 나가는 문제가 절박한 문제로 나르고있습니다.

이러한 미해결과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보면 지난 시기 교육권옹호확대운동의 귀중한 경험을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레컨대 새 세대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단결된 힘으로 벌린 정기권차별시정운동, 고체련, 중체련이 주최하는 전국대회참가자격획득을 위한 운동, 조성금획득과 증액을 위한 운동, 국립대학입학자격인정을 요구하는 운동 등 권리옹호확대운동에서 귀중한 전진을 이룩한 실적과 경험을 살려나가는것입니다.

지난시기 경험을 살려서 운동을 벌려나간다면 눈에 보이는 전진을 가져올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권옹호확대를 위한 운동의 대응에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르고있는것은 우선 교육보조금증액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육권옹호확대운동을

전조직, 전동포들이 달라붙어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입니다.

교육보조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는 앞으로 가까운 년간에 도도부현 단위로는 오사까조선학원의 수준 즉 1 인당 년간 약 9 만엔의 수준, 기타 지방자치체의 단위는 도쿄 23 구의 수준 (약 16 만) 에서 조성금을 급부받도록 운동을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특히 앞선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지역적 차이를 해소해나가는것이 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본국민들속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대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운을 부단히 높여 나가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가 일본각지에 무수히 조직되도록 하는것이라든가, 우리 학교가 있는 모든 도도부현에서 지방의 변호사회에 《인권구제신청》을 하고 권고가 나오도록 하는것도 여론환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 지난기간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유엔기관을 비롯한 국제마당에서 민족교육권리보장에 대한 지지여론이 더욱 높아지도록 계통적으로 사업해나가며 유엔의 각종 조약위원회들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적여론이 더욱 높아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또 재일외국인학교들과 련계를 더욱 강화하여 효고에서와 같이 《외국인학교협의회》와 같은 협의회를 일본 각지에 내오는것도 여론환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일본의 사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하는 권리운동을 보조를 맞추어 진행하는것도 일본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다음으로 미해결문제로는 년금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련의 애족애국사업의 2 대중심기둥의 하나인 동포생활봉사, 복지사업과 관련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문제는 일본정부가 국민년금법을 개정한 1982년에 적어도 해결되어 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국민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고있는 사람들은 2005년 현재로 79 살이상의 재일조선인고령자 (약 4 만명전후로 추정된다) , 또 43 살이상의 재일조선인장애자들 약 4,000 명입니다. 고령자들과 장애자들은 일본인 같으면 당연히 지급되고있어야 할 로령복지년금과 장애기초년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있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본정부가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하기까지 과도적조치로 지방자치체가 《재일조선인고령자 복지보조》라는 형태로 독자적급부를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려나가는것이 과제로 되고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현재 약 700 개의 시정의 지방자치체들에서 독자적인 급부제도를 내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방자치체의 독자적급부제도를 내고도록 하며 그 증액을 위하여 힘써야 할것으로 봅니다.

2)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일본당국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과제

기득권옹호과제로는 총련의 고정자산에 대한 불법적인 과세문제, 재일조선인의 조국에로의 왕래를 위한 《만경봉 - 9 2 호》의 운항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교육보조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처하는것과 도교조선제 2 초급학교의 토지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제들이 나서고있습니다.

총련의 고정자산에 대한 불법적인 과세를 가하는 문제로 주목이 되는것은 2005 년 4 월 21 일에 구마모도지방재판소가 조선회관에 대한 고정자산세 일부 감면조치에 위법성은 없다고한것입니다. 조선회관은 공익성을 가진 공민관류사시설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들에서 제기되고있는 고정자산세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법판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보조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서 참고로 되는 경험은 사이다마현의 고우노스시의 보조금폐지의 철회경험입니다. 동포들은 이 폐지안을 알고 즉각 반대운동을 조직하여 12 일째에 폐안으로 내몰았습니다. 운동에 참가한 동포들은 《권리는 한번 획득하였다고 하여 안심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오늘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경험을 언급하고있습니다.

또 도교 구니다찌시의 보조금폐지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운동에서는 행정측이 보호자부터의 증액요구가 없는것을 구실로 이제 필요없는것이 아닌가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요청사업과 관련하여 동포들은 《시의 직원도 매년 달라진다. 매해 조선학교의 설명을 하러간다, 증액을 요구한다 등 계속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경험적인 발언을 하고있는바 이것은 기득권옹호에서 우리가 참고로 할수있는 내용들입니다.

3)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역사진상규명문제와 일본당국과 개별기업체들이 동포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을 하도록 요구해나갈데 대한 과제

최근 시기 재일조선인의 역사적배경문제와 관련하여 그를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2005년 3월에 스위스의 유엔인권소위원회에도 참가한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자기 사업을 그 폭과 규모를 더 확대하면서 활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이 활동은 아는바와 같이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하고있는것으로서 그 의의가 자못 큼니다.

또한 이 역사규명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것은 일변련이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 인권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2002년 10월 25일부로 일본수상과 일본의 관련기업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권고서를 낸것입니다. 인권구제신청을 하신 분은 지바현의 정운모동포, 아이찌현의 고 김일수동포의 유가족들입니다. (정운모동포관계는 후루가와 기계금속주식회사, 고 김일수동포관계는 구마가이구미) 또 2003년 8월 25일에 요코하마시에 사는 문무선동포(당시 95살)가 제출한 간도대진재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인권구제제기사건에 대한 권고 즉 고이즈미총리대신에게 일본국이 학살만행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할데 대한 권고서를 제출한것입니다.

과거력사규명문제는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정부당국의 역사적책임, 도덕적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습니다. 또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과거문제를 청산해나가는데서 실천적으로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속에서 재일조선인과 관련한 역사규명문제와 일본당국과 개별기업체들에 대하여 동포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것은 오늘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있으며 그를 위한 구체적행동들이 요구되어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3.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해결을 둘러싼 전망

금후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해결을 위한 전망을 장기, 중기, 단기 전망의 3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보기로 합니다.

먼저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해결의 장기전망입니다.

장기전망은 조일관계정상화의 실현과 함께 조국통일이 실현된것을 전제로 하고 설정되는 전망입니다.

여기서는 조일관계정상화뿐만아니라 조국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가 통일조국을 가진 해외조선동포들의 권리문제, 지위와 권리의 보장문제로 될것입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속에서의 《조선》, 《한국》국적이 통일국가의 하나의 국적으로 될것입니다. 통일국가의 해외공민의 지위에서 외국인으로 향유할 권리를 아주 안정하게 누려나가게 될것입니다. 일본사회도 더욱더 다민족다문화화가 촉진되고 외국인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일본국민의 이해가 지금보다 더 깊여지고있을것이 전망됩니다.

다음에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해결의 중기전망입니다.

중기전망은 조일관계정상화가 실현되고 조일관계정상화때에 재일조선인의 지위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지위문제가 그 력사특수사정을 가진 외국인이란 지위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고 지난날 조일관계의 비정상적관계로 인하여 제기된 일본당국에 의한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정책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여나가는것이 전망됩니다.

재일조선인의 민족단체, 대중단체인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근원이 근절되고 재일조선인의 공민권, 재류권, 교육권, 기업권, 생활권 등이 포괄적으로 보장되는것이 전망될것입니다. 즉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시기의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재일조선인의 권리문제해결의 단기전망입니다. 이것은 2007 년을 전후한 시기까지의 금후전망입니다. 운동상 총련 21 전대회까지를 내다본 전망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3 가지 권리옹호과제가 주된 과제로 나서는 시기입니다. 즉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미해결과제실현을 위한 운동이 강화되고 과거력사규명을 위한 운동이 강화되여나갈것이 전망됩니다. 배경적으로는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위한 금후 전망을 주시하면서 벌려나가는 운동입니다.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운동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이 일본당국의 움직임들에 대하여 예리하게 포착하고 제때에 원칙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을 벌려나갈 때 승리할수 있다는것, 기득권을 옹호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기득권의 옹호는 민속한 대응과 견결한 자세가 중요할것입니다.

미해결과제실현을 위한 운동에서 초점은 민족교육의 권리확대운동입니다.

교육의 권리보장을 위한 운동은 1990년대이후만을 보아도 명확한 전진과 성

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 권리의 범위도 확대되고있으며 운동의 참가자들도 폭이 넓고 특히 새 세대들이 주역이 되고 참신한 사업으로 끈질기게 활동하고있습니다. 이 연장에서 생각할 때 교육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운동은 아주 전망이 밝은것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년금문제는 계속 지방자치체에서의 독자적인 급부제도의 적용과 그 액수를 높여나가는것이 진요합니다.

재일조선인과 관련한 력사구명문제는 여러 형태로 벌어지고있으나 이 사업에 보다 힘을 기울여 일본각지에서 그 강제련행, 강제노동문제, 조선인대학살만행 등에 대한 력사구명과 함께 추도비건설, 일본인과의 공동연구, 진상조사사업, 일본대기업에 대한 소송,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사업들을 더 광범위하게 벌려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식민지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 단기전망을 가지는 기간에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재개되고 결실을 맺어간다면 중기적인 전망이 앞당겨지는것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기, 중기, 단기로 전망을 내다본다고 할 경우에 현 단계에서 중요한것은 재일조선인들이 권리옹호운동의 밝은 전망에 대한 표상을 가지면서 권리옹호와 확대운동을 전조직적으로, 전동포적으로 벌려나가 구체적인 실적을 이룩하며 전면적권리획득을 위한 립지를 강화하고 그 담보를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는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은 총련결성 50 뛸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다시한번 재일조선인운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난시기 업적과 성과, 경험을 되새기면서 그에 토대하여 오늘 조성된 환경에 맞게 권리옹호운동을 단결된 힘으로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 재일조선인의 참된 리익과 권리를 옹호, 확대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사협중앙 리사, 조선대학교 교수)

(토론)

《국가자격취득상의 차별시정문제와 다가와 도쿄조선제2초급학교문제에 대해서》

김동학

2년전에 대학입학자격문제에 대한 운동이 양양되어 거의 국립대학들이 우리 학교 고급부졸업생의 수험자격을 인정하는 등 큰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세에 타고 조대생들의 국가자격취득상의 차별도 철폐시키려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맨처음에 과녁으로 삼은것은 사법시험문제입니다. 조대생들은 이제까지 사법시험의 1차시험이 면제안된 탓으로 조대에 다니면서도 중앙대학의 통신제도를 받는 소위 《W스쿨》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인권협회는 조대와 협공하여 재작년부터 이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6일에는 성령(省令)이 개정됨으로써 조대졸업생들에게도 사법시험 1차시험면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자격의 최고봉이라고 말할수 있는 사법시험을 공략한 다음에 조대생들에게는 수험자격자체가 인정안되고있는 사회보험로무사나 세리사시험의 수험자격문제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로무사시험은 작년 12월달에 요청해서 올해 1월말에는 조대졸업생들에게 수험자격이 인정된다는 성과를 거둘수가 있었습니다. 세리사시험의 수험자격문제도 지금 달라붙고있는 도중입니다.

또한 그간 조대생들의 보육사자격시험의 수험자격문제에도 달라붙었습니다.

보육사시험도 이제까지 조대생에게는 재학중의 수험을 인정안하고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도도부현에서는 졸업생들의 수험자격마저 인정안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대와 협공하여 후생로동성과 도쿄도와 사업하여 작년말에는 재학중(졸업을 앞둔 2학년때)에 수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다가와 제2학교토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기본적인것은 신보지상을 통해서도 잘 아시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사람들의 지원활동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 토지재판의 공판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7월에는 일본시민운동가들

이 중심이 되어 350 명규모의 큰 집회를 조직하였으며 올해 들어와서는 문제가 되어있는 제2운동장에서 콘사트를 조직하여 700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흥성거렸습니다. 이것을 조직하는데 우리 동포들도 학교관계자를 비롯하여 응당 준비과정에 참여했습니다만 특히 일본사람들이 이 문제는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일본사회의 문제로 일어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투쟁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에 걸쳐서 논의를 거듭하여 만든 새 세대문제협의회 건의서, 그래서 민족교육협의회건의서의 량쪽에서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보장법, 진흥법 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고있습시다만 대학자격문제나 제2토지문제에 달라붙고온 변호사, 학자, 시민운동가들은 우리와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의 대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나 지원하는 사람들사이에 더 광범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밑에서 9월말 효고에서 다문화공생교육포럼을 기획하고 현재 준비를 다그치고있습니다.

이러한 실천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복잡해도 부당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면 일본사람속에서도 이해자, 협력자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경화경향이 심하고 문제가 많은 일본사회이기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업을 활발하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입니다.

(인권협회 부장)

《새 환경에 대응한 동포경제활동》

리평태

총련 19 차 전체대회는 새 세기를 맞이하면서 동포사회를 민족성과 동포애로 단합된 화목한 동포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민족문화정서가 넘친 유족한 동포사회,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값있게 아바지하는 힘있는 동포사회로 꾸려나갈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총련 20 차 전체대회에서는 이 과업을 《우리는 화목하고 유족하며 힘있는 동포사회를 꾸리기 위하여 재일동포들속에서 상부상조의 미풍을 높이고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도우며 생활봉사와 복지사업을 벌린다.》는 강령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은 화목하고 유족하며 힘있는 동포사회를 꾸리며 또한 애족애국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주동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본보고에서는 재일동포들이 해방후 오늘까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전개하여 온 경제활동의 로정과 경험을 요약한데 이어 오늘 재일동포들이 새 환경에 대응한 경제활동을 전개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놓고 약간의 문제제기를 해보려고합니다.

1.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로정과 몇가지 경험

해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로정은 조국의 보호아래 일본정부의 온갖 차별을 이겨내면서 또 일본의 복잡한 정치, 경제 환경속에서도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기업권과 생활권을 굳건히 지키고 자체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발전을 위해 아바지하여온 자랑스런 력사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 1) 조국해방과 동포경제단체의 결성(생략)
- 2)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생략)
- 3) 재일동포상공인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본군중(생략)
- 4) 몇가지 경험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찾을수 있는 경험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경제활동이 일본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조국이며 조국의 보호없이는 경제활동의 전개가 심히 제한된다는것입니다.

둘째로, 재일동포상공인들이 쟁취한 권리중에서 일본당국이 선의로 베풀어 준것이란 하나도 없고 반대로 탄압과 차별정책을 박차고 단결된 힘으로 투쟁한 결과에 얻어진 투쟁의 산물이라는것입니다. 또한 경험은 우리가 쟁취한 권리는 국제법상으로 보나 해방전 일제가 저지른 역사를 보나 응당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오히려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가혹하게 탄압해왔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경험은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상부상조정신의 미풍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여줍니다.

넷째로, 민족교육을 생명선으로 삼고 애족애국운동을 전개한 결과 우리에게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자라난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또한 경제활동을 안받침하는 여러단체, 사업체가 있으며 이는 동포경제활동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해나가는데 있어서 귀중한 재산으로 된다는것입니다.

2. 현시기 재일동포의 경제활동실태와 동포기업경황에 대하여

총련이 결성되어 50 년이 지나는 오늘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내외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로부터 지난 시기에는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습니다.

1) 재일조선인의 노동력상태와 취업상황에 대하여

현재 재일동포의 노동력상태와 취업상황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서 가장 유력한 자료는 일본관청에서 공표하고있는 《국세조사보고》(総務省統計局『国勢調査報告』)라고 봅니다.

(1) 재일조선인의 노동력상태

《국세조사보고》(2000 년도판)에 의하면 재일조선인·《한국인》이라는 항목의 인구(편의상 이 항목을 재일동포로 본다)는 529,000 명이며 이중 노동력 인구는 279,121 명입니다.

재일동포의 노동력인구비율은 59.7%(남-74.6% 녀-46.8%)로서 이 수치는 일본의 61.1%(2000 년현재)에 비해 약간 낮은 상태에 있으며 일본에 상주하는 그밖의 외국인의 62.8%와 비교하더라도 낮습니다.

녀성의 노동력률을 보면 일반적으로 영어의 《M》*자형으로 되어있다고 지적됩니다.

최근 일본녀성의 노동력의 구조가 약간 변화하고 《M》자형이 전반적으로 무너져나가는 경향에 있다는것을 고려하여도 재일조선인녀성들의 경우 결혼 후의 취업상황은 일본녀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국세조사보고》(우와 같음)에 의하면 재일조선인의 노동력인구는 279,121 명인데 그중 취업자수는 256,127 명이고 실업자수는 22,994 명입니다.

실업률을 보면 $(22,994 \div 279,121) \times 100 = \text{약 } 8.238\%$ 로 됩니다. 같은 《국세조사보고》에 기초하여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노동력인구는 66,097,816 명, 취업자수는 62,977,960 명, 실업자는 3,119,856 명으로서 실업률은 4.72%로 됩니다.(재일외국인의 실업률은 5.7%)

단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통계상 不詳인 10,251 명이 포함안되어있으므로 이 수를 포함시켜서 계산하여도 $(22,994 \div 289,372) \times 100 = \text{약 } 7.946\%$ 라는 결과로 됩니다.

《국세조사보고》가 실업률을 어느정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가 검토할 여지는 있으나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실업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는 것은 확인할수 있을것입니다.

주관이 되지만 그 요인으로서 일본기업에 취직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특히는 바블경제의 붕괴이후에 재일동포상공업의 폐업이 크게 작용하고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 《M》자형이란 녀성노동력이 20 대후반에 그 증가가 정점에 달하고 그후 주로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해 직장을 떨어졌다가 아이가 커지는 40~50 대에 다시 다양한 형태로 노동력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경향을 그래프로 그릴때 그 곡선이 《M》자와 비슷하다는데로부터 이렇게 불리운다.

(2) 취업구성상 특징

상공인수와 관련해서는 상공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놓고 논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국세조사보고》의 〈종업상의 지위〉속에서 역원과 고인(雇人)이 있는 업주, 고인이 없는 업주를 상공인으로 보고 또 가족종업자까지 포함하기로 합니다.

	취업자수	고용자수	고용자률	비고용자률** (상공인)
1985 년	243,120	131,422	약 54.1 %	약 45.9 %
1995 년	266,623	155,081	약 58.1 %	약 41.9 %
2000 년	256,127	157,310	약 61.4 %	약 38.6 %

위의 표는 상공인으로 볼수 있는 비고용자률이 체계적으로 감소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공인의 감소요인으로 생각할수 있는것은 일본의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상공인들도 직접 그 영향을 받고있다는것입니다.

일본의 総務省・經濟産業省에서 해마다 발간하고있는 事業所統計에 의하면 일본은 1994년부터 새로 기업을 시작하는 것(개업률)보다 폐업을 하는 것(폐업률)이 높아지고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수가 감소되어있는데 기업수의 최근 추이를 종업원규모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작은 1~4 명이하규모기업이 1999 년도에 비하여 9.7 %감소, 5~9 명이하규모기업은 5.3 %감소, 10~19 명이하규모기업은 3.6 %감소로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업원수 10 명이하의 기업은 전 사업소수의 80.7 %이며 19 명이하로 보면 91.3 %로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감소률이 높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동포기업도 이러한 영향을 직접 받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상공회회원이 감소경향에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주로 폐업에 의한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요인들에 의해 지금 동포상공인층이 감소현상에 있지만 일본전체, 재일 외국인과의 대비속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 상공인의 비율은 매우 높은편에 속

**비고용자속에서 가족종사자가 18,400 명인데 이는 취업자의 7.18 %로 되며 이를 어떻게 보겠는가 논의되어야 할것입니다.

합니다.

재일동포취업자속에서 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비교

	역원	고 용 자 있 는 업주	고 용 자 없 는 업주	가 족 종 사 자	계
일본인	5.6 %	3.3 %	7.8 %	5.6 %	22.2 %
재일 외국인	6.0 %	4.6 %	5.4 %	3.7 %	19.7 %
재일동포	10.8 %	10.2 %	10.4 %	7.2 %	38.6 %

다음으로 고용자속에는 상시고용자와 임시고용자가 포함되는데 재일동포의 임시고용자비율은 20 %로서 매우 높습니다.(일본은 12.4 %)

일본기업들은 장기의 불황이 계속되는 속에서 생산코스트를 삭감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자를 줄이고 임시고용자를 늘이고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일본의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경향에 있으나 재일동포 경우에는 그것을 훨씬 른가하는 수로 됩니다.

우에서 본 높은 실업률과 임시고용자률(실업자예비군)을 합하면 28 %이상의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일동포상공업의 3 차 산업화의 촉진은 일본의 전반 흐름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에 있지만 서비스업부문전반에서는 일본:27.5 %, 재일:24.0 %인데 그중 도매,소매,음식부문에서는 일본:22.7 %이고, 재일:31.2 %로서 동포상공업은 도매,소매,음식부문이 많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2) 동포기업경황에 대하여

동포기업景況에 대해서는 상공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포기업경황관측조사결과와 日本銀行短期經濟觀測調査 (이하 日銀短觀라고 부름) 를 비교하여 간단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4 년도 일본경제는 전반기에는 수출증가를 기점으로 한 기업수익의 개선이 설비투자의 증가에 파급하는 호순환에 의해 일정한 회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수출의 둔화, I T · 디지털관련분야의 생산조정, 대풍 · 지진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둔화되었습니다.

2004년도 전반기에는 일본경제전체의 회복의 움직임이 중소기업에도 서서히

파급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서한 회복경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이후는 중소기업의 경황감의 회복은 아주 완만한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기업규모, 업종, 지방에 따라서 충분히 회복이 안되는 기업도 많이 나왔습니다. 즉 2002 년초부터의 회복과정은 경황감의 격차가 있는 속에서 의 회복이라는 양상을 띠고있었습니다.

동포기업경황관측조사결과를 보면 동포기업의 경기회복국면은 2003 년후반 부터입니다.

2005 년 4 월에 발표된 日銀短觀에 의하면 경기의 현황은 하강국면에 들어섰 습니다.

이 결과는 동포기업은 일본기업이 회복한 후에 뒤늦게 회복을 한다는 현상 다시말하여 동포기업의 경기회복에는 타임라그가 생기며 이 타임라그는 하강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것을 확인하여줍니다. 즉 동포기업은 회복기에는 일 본기업보다도 늦게 회복하고 하강기는 일본기업보다도 빨리 영향을 받는 경 향에 있다는것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재일동포들이 종사하는 업종과 기업규 모의 특징을 들수 있으며 또한 기업경영전략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 토해볼 여지가 있다고봅니다.

3. 새 환경에 대응한 동포경제활동

일본정부의 악의에 찬 반공화국, 반총련책동과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악화와 기업간경쟁의 격화, 조은의 파탄 등은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습니다.

또한 재일동포사회에서 새 세대가 주역으로 등장하고 직업구성에서의 변화, 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는 새로운 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미관계와 조일관계의 개선, 6.15 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의 조국통일 정 세 특히는 개성공업지구추진에 대표되는 북남경제교류의 확대는 재일동포들 의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것입니다.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을 둘러싼 주객관적환경은 크게 달라졌으며 이에 옹 게 대응하여야만 우리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경 제적으로 안정되고 애족애국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 하면서 떼떽이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새 환경에 대응한 동포경제활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새 환경을 직시하고 사고를 전환하여 환경변화에 옹기 대응하는것입니다.

조미대결의 종결산과 조일국교정상화, 북남경제교류의 확대는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는데서 중요한 환경변화로되지만 이 변화는 어디까지나 유리한 주변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총련의 기본사명의 하나로, 애족애국활동을 담보하는 문제로 보고 현시기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의 실태와 겪고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또 새로 마련되는 조건,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깊여나감으로써 환경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유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적 미풍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총련 20차 전체대회는 동포상공인들이 겪고있는 오늘의 경영상의 난국을 이겨내면서 동시에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환경을 전망하여 기업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동포경제망을 형성,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화해나갈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동포경제망은 애족애국의 리념과 민족성,민족적단결과 상부상조의 전통적미풍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동포기업네트워크화하여 유형,무형의 경영자원을 교환,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공간으로 하여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경영상의 실리는 물론 동포들의 경제생활에도 실리를 도모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원리는 자유경쟁속에서 리익을 추구하게되지만 우리의 경제망은 애족애국의 리념과 민족성에 튼튼히 기초하여 이를 살리는 방향에서 실리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네트워크가 주목되고있고 또한 총련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것은 네트워크가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도정보화시대의 기업경영에서는 정보, 지식 등의 정보적경영자원이 주목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적경영자원은 제 3 자와 교환,결합됨으로써 경영을 혁신하고있습니다.

올해 결성 10 뛼을 맞이하는 청상회에서는 1,2 세 상공인들의 애족애국의 대를 이어갈뿐만아니라 경제활동에서 기존의 틀과 업종에서 탈피하고 새 영역

을 개척하며 또한 경영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상회에서는 결성 10 돌을 맞이하면서 《Kyc 비즈니스마네지먼트》 발족을 준비하고있으며 이는 동포경제망을 형성하는데서 매우 주목할만합니다.

《Kyc 비즈니스마네지먼트》는 우선 회원들의 다양한 니즈부터 출발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상회가 가지는 경영자원(400사의 동포기업을 데타베이스화)을 최대한 리용하자는것이며 상공련을 비롯한 전문기관과 제휴하면서 또 동포유자격자들의 협력을 받으면서 운영되는것입니다.

그리하여 첫째로, 새로운 사업의 전개를 적극 지원하자는것이며 둘째로, 정보교환과 말칭그(이업종교류, 기업간관계의 중개) 셋째로, 투자안전의 제안 넷째로, 기업(起業)을 적극 지원하자는것입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지금 재일동포들속에서 실업, 림시고용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있는데 고용자들도 동포경제망에 적극 망라함으로써 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뿐만아니라 그들도 동포경제망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동포기업네트워크에 기초한 동포경제망을 통일된 조국을 넘두에 두고 세계에 흩어져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동포들도 망라되는 폭넓고 실질적인 리익을 도모하는 경제망으로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보고를 준비하면서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연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와 실태자료들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것을 통감하였습니다.

우리는 동포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사업을 총련의 여러 기관들과 힘을 합쳐 적극 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경영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도로서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함으로써 애족애국사업의 새로운 단계를 주동적으로 열어나갈 결심을 피력하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협중앙 상임리사, 조선대학교 강사)

(토론)

《기업네트워크강화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럼귀성

지난 2004년 5월 28일~29일에 걸쳐 진행된 총련제20차전체대회에서는 동포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을 적극 도와나서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동포경제망을 형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화해나갈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기업네트워크의 형성, 강화대책은 현시대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와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환경을 전망하여 세워진 대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영환경의 변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과 일본과의 정치적긴장상태의 지속을 들수있습니다.

조국과 일본의 관계과 긴장상태에 있으므로 일본에서 기업경영을 하는 우리 동포상공인들에게는 정치경제적 차별과 세금징수의 강화 등 여러면에서 경영 압박을 가져오는 환경에 있다는것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일본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업간의 과당경쟁의 격화와 일본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를 들수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환경이 변화해나가는데 따라 우리는 조직적인 대책을 세워 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자는것이 이번 기업네트워크의 형성, 강화대책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네트워크란 각 개별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우리 조직에는 기업네트워크자체는 형성되어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는 힘으로는 안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네트워크자체는 시스템에 지나지않으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여 곧 은이 나오는것은 아니다하는것을 나타내고있습니다.

기업네트워크를 형성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총련산하 상공인들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기금 형성되어있는 네트워크를 분석해보면 시공간을 축으로 하여 운영이 되

여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슷한 세대,같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축으로 하여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자고 하는 성과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축으로 하기보다 기능적인 측면을 축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을 축으로 운영한다는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들이 시간간의 벽을 넘어서 정보를 교환하여 새로운 발상을 가져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미 형성되어있는 시공간을 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기능을 축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이행하는것만으로 많은 은을 낼수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성과를 얻자면 이미 있는 여러 네트워크끼리를 더 큰 네트워크로 이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총련산하조직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하단체들은 강위력한 네트워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청, 류학동, 청상회등 일정한 모양을 가진 네트워크를 크라스타라고 규정할수 있습니다.

이 크라스타끼리를 이어주어 더 큰 네트워크를 형성, 운영하는것이 앞으로 도래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레컨데 체련을 하나의 크라스타로보고 청상회도 하나의 크라스타로 보면 이 체련과 청상회를 이어주는 마당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는 이제까지없는 발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우에서 본봐와 같이 네트워크는 그것을 구축하는것이 목적화하는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여 나가야 하며 그를 실천하기 위한 인재,조직의 육성을 기본으로 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기어이 총련 20 전대회결정을 관철하여 화목하고 유족하고 힘있는 동포사회를 꾸려나갑시다.

(조선대학교 조수)

在日本朝鮮商工連合会
常 任 理 事 会

〒110-0005 東京都台東区上野 7-2-6
電話 03 (3844) 4111

在日本朝鮮東京都商工会
常 任 理 事 会

〒110-0005 東京都台東区上野 7-2-6
電話 03 (3842) 6711

在日本朝鮮北海道商工会
常 任 理 事 会

〒064-0805 札幌市中央区南五条西 1
電話 011 (511) 7232

在日本朝鮮愛知県商工会
常 任 理 事 会

〒464-0858 名古屋市千種区千種 3-6-5
電話 052 (733) 0801

在日本朝鮮人総聯合会
埼玉県本部常任委員会

〒336-0012 さいたま市岸町3-3-23
電話 048(822)5111

在日本朝鮮人総聯合会
群馬県本部常任委員会

〒371-0844 群馬県前橋市古市町213-2
電話 027(251)6764

在日本朝鮮人総聯合会
福島県本部常任委員会

〒963-8861 郡山市鶴見坦1-5-30
電話 0249(22)3554

在日本朝鮮人総聯合会
山形県本部常任委員会

〒990-2445 山形市南栄町2-4-2
電話 023(622)8712

사회과학논문집 제18호
(총련결성 50돛기념호)

편집발행 在日本朝鮮科学者協會 中央常任理事会
〒12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4-33-14
TEL/FAX 03 (3816) 4335
e-Mail sahyob@iris.ocn.ne.jp
발행날자 2005년 8월 5일
인쇄 조선대학교 출판부
